

연간

다 함께

2003년 2월 [21호]

부시의 전쟁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반대

북한 핵 개발과 미국 /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미국 제국주의 분석
앨릭스 캘리니코스 대담 / 제국주의와 전쟁 / 노동 계급 문화는 있는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미라크를 공격하지 말라

**DON'T
ATTACK
IRAQ**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2월 15일 국제반전행동의 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문의 : 02-2631-5027~8

stopwar@jinbo.net

이 날 유럽 전역과 미국 등 대부분의 대륙에서 반전
행진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

올해 우리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전쟁이다.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는 이라크 민중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금 전쟁광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미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를 증동으로 옮기고 있다.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려는 사악한 정권들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말처럼 미국이 슈퍼 강대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미국의 군비 지출은 17조 달러에 이른다.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미국 정부는 재판도하지 않은 채 ‘적군 포로’를 관타나모에 억류·고문하고 있다. 부시 일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라크는 무기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전쟁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에 불리한 언급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에도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기사찰단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230개의 사찰 대상에서 ‘결정적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라크 공격을 위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라크의 ‘반항’을 굴복시키겠다는 부시의 공언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부시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라크가 ‘결정적 위반’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데도 부시가 군대를 걸프 지역으로 파병하는 까닭이다.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2만여 명의 영국 군대를 전쟁에 동원하려 한다. 블레어의 전쟁 지원 노력 때문에 노동당원들은 심각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노동당을 탈당하거나 노동당에 대한 노조의 정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블레어의 정치 위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

크 전쟁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블레어는 부시의 전쟁 계획을 지지하는 몇 안 안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블레어의 위기는 부시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목적이 이라크에 매장돼 있는 막대한 석유 자원(확인된 것만 1130억 배럴이다)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각성이 정치화·급진화와 함께 국제적 규모의 반전 운동을 고무하고 있다.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쟁 노력과 전쟁 명분에 회의적인 때는 없었다. 동시에, 전쟁광들이 지금처럼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쟁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데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반전 운동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이다.

지난해에 반전 운동은 거대한 일보를 내딛었다. 특히, 9월 28일 영국 런던과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의 반전 시위는 반전 운동의 이정표였다. 전쟁에 반대하는 정서가 모든 대륙에 존재한다. 팔레스타인, 유럽사회포럼, 아시아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적 규모에서 반제국주의 정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제 반전 활동가들은 2월 1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정했다. 서울에서도 2월 15일 종묘공원에서 반전 평화 대행진이 열릴 것이다. 2월 15일은 세계 민중이 거리로 나가 부시의 야만적인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 02-2631-5027~8, stopwar@jinbo.net)

끝으로, ‘변혁인가 야만인가’ 준비 문제 등 일부 사정으로 이번 호에서 다루려 했던 반미·반전 운동 전술 기사를 실지 못했다.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렸을 기사를 실지 못해 아쉽다. 다음에 다루겠다는 약속으로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한다.

목차

- 3 편집자 머리말
- 4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 8 끝없는 전쟁
- 12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미국 제국주의 분석
- 19 주한 미군 반대 운동의 미래
- 20 정당과 운동
- 22 엘릭스 캘리코스/루카 카사리니 대담 : 정당과 전쟁 문제
- 27 뒷걸음질치는 노무현 개혁
- 28 개혁신당 사무총장 대행 인터뷰
- 32 노동 계급 문화는 있는가?
- 37 영어 공용어화 논쟁
- 40 세계사회포럼
- 42 세계경제포럼
- 45 ‘변혁인가 야만인가’ 연사 책 소개
- 46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시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Fax : 02-968-5907
E-mail : attogether2002@lycos.co.kr
http://attoget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 attogetheredil@lycos.co.kr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김하영 북한이 지난해 말 핵 시설들의 봉인을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을 추방했다. 그러자 미국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분열이 깊어졌다.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서 전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다”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라크 전쟁과 동시에 북한과도 싸울 수 있으니 까불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1999년 나토 전쟁 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원 전략”을 폐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즉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무기사찰단을 받아들인 이라크는 치겠다고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쫓아낸 북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며 미국의 모순을 비꼬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미국측 협상 당사자는 갈투치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핵 폐기를 선언할 때까지 대화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것도 외교냐”고 비난했다. 일본과 한국 정부로부터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미국 책임이 큰 거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심화를 원하지 않는다. 한·미·일 사이에 대북정책을 조정감독하는 회의가 있다. 티콕이라고 줄여 말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를 낸 것은 한·일 정부들의 이런 불만 때문이었다. 미국은 계속 막무가내로만 나가다가는 북한을 압박하는 일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보’는 시늉 수준을 넘지 않았다.

애초에 한국 정부는,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김정일 체제를 보장하는 대타협을 이루자는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를 미리 안 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중재”라는 표현을 거둬들였다. 형식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실질적인 내용이라도 일부 관철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대화는 하되 타협은 없다”며 대화의 의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은 그동안 보상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는 아예 어떤 보상도 없다고 못박으며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한다. 북한이 여기에 응할 턱이 있겠는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학생 주임이 그가 보기에 “문제야” 학생을 불러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는 식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일방적 독주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간다는 비난을 슬쩍 피해 시간을 벌면서 공을 북한에 떠넘겼고, 북한은 이에 NPT 탈퇴와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으로 맞받아쳤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한 길을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힌 때 나온 반응이어서 미국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초강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핵을 폐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었다. 미국에게 당신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거면 핵문제·미사일 문제와 중유 제공·체제 보장 같은 실질적인 쟁점을 테이블에 올리시오 하고 말한 셈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 문제에 매여 있는 점, 다른 강대국들과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독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의 조건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양날의 칼을 담고 있는 셈이다. 두 날 가운데 한 날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재개가 동아시아 지역에 끼칠 영향을 부시 정부는 우려한다. 그래서 부시 정부는 일단 다른 한 날인 ‘핵 폐기-체제 보장’ 맞바꾸기를 잡고 북한을 ‘대화’에 묶어 두며 시간을 벌기로 한 듯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그래, 어디 한번 실수해 봐라. 우리가 손을 봐줄 테다’ 하고 중동처럼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일본에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고,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일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어디까지 번질지 미국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시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분명한 전략이 서 있는 것 같지 않다. 부시 정부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인 중동에서 벌일 이라크 전쟁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북한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3주 동안의 상황 전개를 보면, 북한이 강수를 둘수록 부시 정부는 오히려 말랑말랑해져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 쪽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든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 해도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까지 북미 대화는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질질 끌면서 결국 위기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 1994년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는 1993년부터 시작된 북미간 핵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엇그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한 말은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순탄히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핵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네바 합의 때 약속했던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지어 주는 일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비록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동아시아 지역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몰고 가고 있다.

부시의 공격적 세계전략

최근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더 넓히고 좀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북한을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태가 북한의 핵 시설 봉인 제거에서, 또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대응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주된 원인은 부시 정부에 있다. 부시는 이미 취임할 때부터 제네바 합의(1994년)와 북미 공동성명(2000년)을 존중할 의사가 없었다. 사실, 약속 어기기는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봉인하는 데 대한 대가로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형 원자로를 지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중유 제공도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2003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수로는 2008년이 돼도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또, 클린턴은 1999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대가로 경제 체제 해제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부시는 한술 더 떴다.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남한 등 주변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도 부시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부시 정부는 남한 정부에게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남북 평화 협정도 체결하지 말라고 했으며, 최근에는 남북 경제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2000년에 ‘국익의 증진’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북한 같

은 정권에 단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권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들에 대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최선의 방어는 분명하고 고전적인 억제책이어야 한다. 즉,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갖는다면 그 무기는 쓸모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가적 멸망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말은 북한을 협박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독을 줄라 약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화는 해도 협상은 없다’는 방침은 바로 이런 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9·11 이후 부시 정부는 한층 공격적인 세계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9일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테러 지원국들이 미국과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을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라크·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그 해 6월 부시는 “악의 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밝혔다. 이른바 “선제 공격 독트린”이다. “우리는 비확산 협정에 서명한 뒤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기는 독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 테러와의 전쟁은 방어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적과 전투를 택해야 하고, 적의 계획을 가로막아야 하며, 최악의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과 대결해야 한다. 우리가 들어선 세계에서, 안정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은 공격하는 길이다.”

선제 공격의 첫 대상은 이라크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오늘

날의 자본주의 기업은 산업을 점점 더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독일·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의 석유 공급이 미국의 군사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들은 미국보다 더 수입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열강들이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을 천명하려 한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 다음의 14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크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 다음의 3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자신과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까 봐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불량 국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우리의 전략은 잠재적 경쟁국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부시 정부는 지금이 경쟁국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는 막강한 군사력과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이라크를 침공하려 하고,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가 단순히 미치광이 전쟁광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계산에 바탕한 미국 공화당내 우익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이 불안정의 한 사례다. 미국은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위협을 해 왔다. 서로 적대하지 않기로 했던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성명도 어겼다. 그

리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한다”고 했던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3조 1항)도 어겼다.

이에 북한은 NPT 탈퇴로 맞섰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가

부를 수 있는 한 쟁점이 일본의 핵 무장이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자유당 당수 이치로 오자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핵 발전소에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으며, 3~4천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군사력에서 누구에게도 얻어맞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핵과 미사일 위선

상당수 NGO들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과 북한 모두 나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을 해 왔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내의 일부 단체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면 이런 입장은 결국,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기피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의 핵 개발도, 김정일 정권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마당에 무기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미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을 똑같은 반열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와 민주주의에 아무 관심이 없다. 미국은 자기 나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가난과 기아와 질병을 만연시켰다.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흉악한 독재자를 지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

다. 이 문제에 관해선 다른 나라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다. 미국은 남한의 군사 독재를 줄곧 지원했다. 남한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킨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 민중이었다.

미국이 북한 핵을 문제 삼는 것도 완전한 위선이다. 북한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북한 당국을 빼고는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핵 사찰을 몇 번이나 했지만 북한 핵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공업국이고, 흑연 감속형 핵발전소를 가동한 적이 있고, 핵 재처리 시설도 가지고 있고, 우라늄 자원도 풍부하다.

하지만,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할 데 없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 전쟁 위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만6백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게다가 앞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최근에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조약이 바로 NPT다. NPT는 핵무기를 버섯이 다량으로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장치이다. ‘나는 되도 너는 안 된다’는 위선적인 조약이다.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게 누구냐에 따라 이중 잣대를 사용해 왔다. 미국의 중동 지역 경비전인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2백기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NPT에 가입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를 문제 삼은 바 없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미국은 “국제적 의무를 지키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할 도덕적 명분이 조금도 없다. 미국은 1년여 전에 핵실험 금지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것은 지난해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파키스탄 갈등에서 보듯이 세계 핵무기 경쟁을 부추겼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도 탈퇴했다. 생물학무기제한협정과 소형무기거래 규제안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지(1월 11일치)는 “그 자신이 군축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 정부로서는 다른 나라에 군축을 강요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를 만드는 명분일 뿐이다.

민족주의는 일관된 반미를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좌파는 모두 미국의 대북 위협에 반대한다. 반대 운동을 실제로 구축하는 별개 문제이지만 말이다. 좌파 안에 여러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에 비추면 이 투쟁에서 그 대부분은 사소한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반미 운동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다면 이 차이를 흐릴 수는 없다.

첫째는 운동의 일각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북미문제 중재자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온순한 동맹국을 잃고 싶지 않은 미국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불러일으키는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첫째, 노무현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근본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한미 동맹의 유지를 중요시한다. 노무현은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전쟁광으로 여기는 부시에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호감을 표시하며, “세대가 비슷해 잘 통할 것 같다”고 했다. 둘째, 한국은 이 지역을 불안정으로 몰아넣는 한 당사자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무기를 증강해 왔으며, 일본이 핵무장 의도를 드러낼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할 수도 있다.

둘째는 ‘북핵 문제가 터졌는데 이라크 전쟁 반대 얘기는 왜 하느냐’며 이 문제를 이라크 전쟁 반대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다루기도 급급한데 다른 나라 문제 다루게 됐다는 생각, 또는 쟁점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 심지어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면 상대적으로 북한쪽 숨통이 트일 수 있으므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것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견해이지만 말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내 문제와 관련돼 일어나는 반미 시위들은 그 동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컨대, 여중생 촛불 시위 범대위가 이라크 전쟁 반대를 주장할 것 같은 연사들에게 연단을 내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1986년 봄 ‘반전반핵 양키고함’을 외치며 김세진·이재호 열사가 몸을 불사른 일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만 보더라도 우리는 훌륭한 반미 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반미 운동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거듭날 필요가 있다. 미국 제국주의를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로만 보서는 안 되며, 국제적·지구적 시야에서 봐야 한다.

나는 앞서 최근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부시 정부의 공격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세계 전략과 그것이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일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부시 세계 전략의 첫 실험대가 이라크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여

기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재천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좌파와 함께 우리의 중요한 임무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 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의 대북 위협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지역만 다르지, 위협의 원천은 똑같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들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더욱 거만해져 효순이 미선이에 게 저지른 일을 언제든 다시 반복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전세계 민중의 승리가 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뒤 2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겁을 먹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반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과 미국 문화에 대한 혐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유 시장 체제 도입을 강요하며 가난과 질병을 낳고 있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이라크 전쟁에 혈안이 돼 있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는 이 문제들과 서로 연결돼야 한다. 

끝없는 전쟁

드라간 플라브시치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

평범한 시민, 급진적 운동가, 노동조합 운동가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서 싸운 시애틀 시위 이후, 자본가들과 반자본주의자들 모두 “세계화”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에게 그 낱말은 주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같은 선진 공업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궁핍화시킨 경제적 과정을 우아하고 간략하게 묘사한 말이다. 이것은 WTO·IMF·세계은행(WB) 같은 세계 금융 기구들이 행사하는 엄청난 권력을 편리하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금융 기구들은 채무국들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요한다. 요컨대,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경제 용어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세계화에는 우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군사적 차원이 있다. 사실, 세계화의 성공에는 이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미국과 주요 공업국들이 정치·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세계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미국과 주요 공업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착취할 수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가 최근 말했듯이, “국제 금융 기구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국가 기구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그 결과 “주변부 국가들보다 중심부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더 강력한 구실을 하게 됐다”고 카갈리츠키는 지적한다. 그래서 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15퍼센트의 투표권이 필요한데 미국은 17퍼센트의 투표권을 갖는다. 최상위 7대 공업국들인 G7이 모두 합쳐 결정적인 45퍼센트의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은 WTO에 2백50명의 상임 대표단이 있는 반면, 35개 최빈국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세계 금융 기구의 활동 무대에서 경제적·정치적 완력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서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사용도 수반한다. <뉴욕 타임스>에 국제 문제에 관한 칼럼을 쓰는 토머스 L 프리드먼은 맥도날드가 있는 두 나라는 결코 싸운 적이 없다는 기발한 말을 했다. 그런 프리드먼조차도 “실리콘 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번창하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이지 않는 주먹을 미국 육군·공군·해군·해병대라고 부른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가 없다면 세계화는 결코 작동할 수 없고, NATO가 없다면 IMF와 WTO는 번창할 수 없다.

세계화라는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 말이 묘사하는 과정 — 자본주의가 세계 규모에서 점차 국제화한 — 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맨 처음부터 국가 권력이나 제국주의의 등장과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이 연관돼 있었다. 이러한 연관의 역사적 근원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는 경제 위기 때 몰락한 중소기업들의 폐허 위에서 대기업들이 형성됐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국내 경쟁업체들과 경쟁하는 데서 더 유리했고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은 독점 기업들이 됐고 자기들의 경제적 비중을 이용해 자국 국가에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과 독점 자본은 점차 통합됐고, 독점 기업들이 자국의 국가적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시장·투자·원료를 찾아 나섰을 때, 그들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자원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를 전 세계에 강요했다. 제1·2차세계대전이라는 대량 학살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군사 대국의 부상과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그들의 투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화가 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국주의적 전쟁 물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논평가들은 매우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의 진정한 결과가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세계일 것이며 시장을 통해 서로 연결된 세계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세계에서는 국경·국적·국가가 사라질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과 군사력 사이의 관계를 달리 보았을 법한 프리드먼조차도 자신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세계화의 현대식 버전은 … 전쟁을 피하려는 의욕을 증대시키고 현대 역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전쟁 비용을 증대시킨다.” 하고 주장했다. 1996년 당시 WTO 사무총장이던 레나토 루지에는 이런 주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 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세계화냐 전쟁이냐” 하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를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0년대에는 주요 제국주의 전쟁이 두 차례 벌어졌다. 첫번째는 1991년 걸프전이고 두번째는 1999년 발칸 반도 전쟁이다. 두 전쟁 모두 그 기원을 파악하려면 세계화와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권력의 작용이라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전쟁의 결과는 재앙이었다.

미국이 개입한 대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발단이 돼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력이 걸프에 집결했고 뒤이은 살육전에서 이라크인 1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라크의 군사적 패배 이후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경제 체제 때문에 이라크는 궁핍해졌고 그 결과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이 에이즈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망자 수에 관한 질문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그토록 경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라크를 경제적·군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와 함께 아랍 국가가 중동산 석유에 대한 서방의 통제권을 위협하거나 웨브론·엑손·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 같은 미국과 영국의 거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막대한 이윤을 위협한다는 발상도 파괴하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 권력 및 군사력과 다국적 자본의 경제력의 통합이 우리 시대 제국주의적 전쟁의 배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고슬라비아 전쟁도 소련 제국의 붕괴, 그에 따른 다국적 자본과 미국 국가 권력의 동진이라는 더 광범한 맥락에서 떼어 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IMF 구조조정 계획이 러시아와 동

유럽의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 때,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 경제에서 더 수익맞는 부문들을 우려했고 있을 때, 러시아의 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을 강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체코공화국·폴란드·헝가리가 NATO에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칸 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동맹국을 짓밟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전쟁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클린턴과 그 동맹국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먹인 온갖 인도주의적·도덕론적 미사여구 뒤에서 주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주요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전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석유를 발칸 반도를 통해 서방으로 수송할 필요 때문에 어떻게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평정했는지 하는 것들이다. 199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석유 회사들은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카스피해 연안 나라들과 그루지야 같은 주변국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이다. 1997년 9월 <뉴욕 타임스>는 “뮤추얼 펀드, 상품 선물, 기업 합병은 있어라.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유럽의 통화, 태국 증시도 있어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부(富)가 가장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카스피해 바닥과 그 연안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지대다. ... 서방의 안보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노다지의 전략적 의미에 매료되는 것은 석유회사 중역들이 자금 조달에 눈이 뒤집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하고 보도했다. 따라서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몰도바·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이 동맹을 결성한 것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러시아를 배제한 채 그 지역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1999년 6월에 <사회주의 평론>은 존 리즈가 쓴 “NATO와 신제국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고슬라비아 폭격과 발칸 반도를 지나는 파이프라인 사이의 연계 가능성을 처음으로 파헤쳤다. 그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비웃음이었다. 조너선 프리드랜드는 <가디언>에 쓴 글에서 이를 모욕적인 말로 경멸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이 전쟁이 석유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코소보에는 석유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그 동지들은 ... 이구동성으로 그렇다,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카스

피해의 석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 [카스피해]은 유럽 대륙의 거의 절반만큼 멀리 떨어진,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박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 6월 2일, 프리드랜드가 쓴 기사가 <가디언>에 실린 바로 그 날 미국 무역진흥청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 TDA) — “미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 은 불가리아·마케도니아·알바니아를 가로지르게 될 발칸 횡단 파이프라인의 타당성 조사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불가리아에 58만 8천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DA 청장인 J 조우섭 그랜드메이슨은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격렬하다. ... 이번 자금 제공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고 말했다.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발칸 횡단 노선은 터키를 경유하는 노선보다 3배나 쌀 것이다. 그 날 소피아에서는 불가리아 주재 미국 대사인 아비드 볼렌이 불가리아 부총리 예브게니 바카르제프와 자금 제공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 다음 날인 1999년 6월 3일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

NATO가 코소보에 개입한 동기가 발칸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NATO가] 그 지역에 [개입한] 결과도 재앙으로 입증되고 있다. 결국 인종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던 전쟁 때문에 코소보에서는 소수 세르비아계가 제거되고 단일 인종만 남게 됐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던 전쟁 때문에 코소보는 서방이 임명한 자의 통치를 받고 서방 군대에 치안을 맡긴 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그리고 발칸의 평화와 안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던 전쟁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코소보해방군 (KLA)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알바니아 민족주의라는 유령은 1999년 폭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불러 낸 것이다. 그 유령은 지금 미국이 시도하는 바로 그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달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듯이, “지금 발칸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알바니아 극단주의다.” KLA가 제공한 무기로 무장한 알바니아 반군은 코소보 국경의 완충 지대

에서 세르비아 경찰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고, 인접 마케도니아에서 군대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마케도니아에서 큰 위험은, KLA의 성공에서 분명하게 배운 소수와 알바니아계와 다수와 세르비아계 사이의 전면적인 내전이다. 그 곳의 한 알바니아인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배웠다.” 한편에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또 다른 인종 재앙의 가능성이 있는 발칸 반도의 쓰라린 아이러니는, 이제 미군이 알바니아 게릴라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사실뿐 아니라 NATO가 2년 전만 해도 불가대전의 원수였던 유고슬라비아 군대에게 코소보의 완충 지대에서 반군 소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NATO의 코소보 개입이 이 지역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발칸 반도의 인종 분쟁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확산시켰을 뿐이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이와 마찬가지로 불길한 것은 NATO의 발칸 개입이 촉발한 군사력 증강이다. 지난 달 중국이 방위비 지출을 18퍼센트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국방 정책 입안자들은 NATO의 코

소보 개입으로 서방의 끈질긴 간섭 의도가 밝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고 보도했다. 부시가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미사일 방어) 계획을 부활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의 볼셰비크 니콜라이 부하린이 도달한 결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부하린은 이렇게 썼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장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전쟁 없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혼란에 빠진 [영국] 신노동당은 세계화와 전쟁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는가?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신노동당의 가장 공격적인 전향자인 국제개발부 장관 클레어 쇼트가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 다국적 자본이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자본이 아프리카 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전쟁에 대해서는, 신노동당이 NATO의 동진, 유고슬라비아 전쟁, 끊임없는 이라크 폭격을 열광적으로 찬성하는 것을 보면 자명해진다. 따라서 조지 로버트슨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끈덕지게 옹호한 덕분에 귀족 작위와 NATO 사무총장직을 유지했다. [이것은] 노동당의 첫번째 지도자이자 잊혀진 영웅인 케어 하디가 제1차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발표한 용감한 성명서와 전혀 판판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유럽의 전쟁 위험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고려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 정부가 노동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런던과 모든 공업 중심지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를 벌입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야만적인 세력의 지배를 끝장냅니다! 전쟁을 끝장냅니다! 민중의 평화로운 지배를 쟁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대안은 우리 지배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화냐 전쟁이냐”가 아니다. 그것은 1914년 하디가 맞닥뜨린 것과 동일하다. 즉, “전쟁이냐 사회주의냐” 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이 편 들고 있는 것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노동당이 국내에서는 사기업화를, 해외에서는 세계화를 끈질기게 옹호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NATO의 확장과 미국 제국주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의 일부다. 블레어의 신노동당 안에서는 케어 하디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은 신노동당 · 세계화 · 전쟁과는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대알바니아가 건설된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를 것이다.



독수리 추락하다

이메뉴얼 윌러스틴
예일대 사회학 교수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지성》 11호
(2002년 봄·여름)에
실린 글을 다시 싣는
것이다. 다만 원문과
대조해 몇 군데는 수
정했다. 게재를 허락
한 《열린 지성》에
감사드린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 베트남과 발칸반도에서 중동과 '9·11 사태'에 이르기까지 도전들은 미국의 주도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배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저항하여 점차적인 몰락을 급속하고 위험천만한 하강으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이를 믿는 사람들이란, 몰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소란스럽게 주장해 대는 미국의 매파 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끝났다는 믿음은, 2001년 '9·11 사태'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미국의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상, 지난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세계적 권력은 황혼에 이르렀다. 더욱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러한 황혼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가 쇠퇴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20세기 특히 마지막 30년 동안의 지정학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단순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헤게모니에 이바지했던 바로 그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요소들 때문에 미구에 닥쳐 올 미국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헤게모니의 서곡

미국은, 1873년 세계 불황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과 독일은 세계 시장에서 비중 있는 두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장의 대부분은 영국 경제의 쇠퇴를 밀천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과 독일은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방금 막 확보한 상태였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켰고,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고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1873년부터 1914년까지, 미국과 독일은 선도 산업에서 주요한 생산국이 되는데, 미국은 철강과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독일은 산업 화학 분야가 그것이다.

역사책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이며 2차대전은 1939년 발발해서 1945년 종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미국과 독일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연속적인 '30년 전쟁'이라

고 보는 게 더 이치에 맞다. 30년은 여러 차례의 휴전과 지역적 규모의 분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헤게모니 승계를 위한 경쟁은 1933년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맞게 된다. 나치는 독일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세계 체계를 초월하려는 갈망을 드러내는데, 당대 체제 내에서의 헤게모니 획득이 아닌 전 세계적 제국의 형태를 구축하려 시도한다. 나치의 슬로건이었던 '천년제국(ein tausendjähriges Reich)'을 상기해 보라. 이와 달리 미국은 중도적인 세계 자유주의의 옹호자 역할을 자임하면서—전직 미 대통령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떠올려 보라—독일과 그 연합국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소련과의 전략적인 동맹을 맺게 된다.

2차 대전은,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유라시아를 통틀어 기간 시설과 사람들 모두에게 막대한 파괴를 초래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상처에서 면제받지 못하였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떠오른 유일한 산업대국이 미국이었고, 더 나아가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으며, 재빨리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떠오르는 패권 국가는 몇몇 실질적인 정치 장애물에 직면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국들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추축국에 대항하는 데 연합하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연합'을 건 설하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이 기구의 결

정적인 특징은 ‘안전 보장 이사회’였는데,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였다. UN 헌장에서 5개국—미국과 소련 포함—에 거부권을 부여했으므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실질적인 위력이 없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 지정학의 한계를 규정했던 것은, 1945년 4월 UN의 창설이 아니라 두 달 전에 이뤄진 루즈벨트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사이에 이뤄진 알타회담이었다.

알타회담의 공식적 합의는 비공식적인, 즉 얘기되지 않은 합의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되지 않은 의견 일치는, 미국과 소련의 향후 수년간의 행보를 관찰한 후에라야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5월 유럽에서 전쟁이 종결되자 소련과 서구연합군(즉, 미국, 영국, 프랑스) 병력은 특정 장소

들, 특히 ‘오데르

나 이 세 선

(Oder -

NeisseLine)’이라 불리게 되는 유럽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을 따라 배치되었다.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을 제외하면 그들은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알타회담은, 양측 모두 거기에 머무를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암묵적 합의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한국의 분단과, 일본을 미국이 차지한 것에서 드러났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볼 때 알타회담은, 소련이 세계의 1/3을, 그리고 미국이 그 나머지를 지배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합의였던 것이다.

워싱턴은 더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다. 소련이 세계 최고의 지상 병력을 보유하게 된 반면, 미국 정부는 군사력을 축소하라는 국내의 압력, 특히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상 병력이 아닌 핵무기(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군력의 증강도 포함하여)의 독점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1949년에 소련 역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후로 미국은 또 다른 열강들이 핵무기(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역시)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기를 쓰고 막아야 했다. 결국, 이런 노력은 21세기 들어 수포로 돌아간 듯하다.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라는 ‘공포의 균형’ 속에 공존해 왔다. 이런 현상이 심각한 시험에 빠진 것은 단 세 번이다. 1948년에서 1949년까지 있었던 베를린 봉쇄,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 전쟁, 그리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그것이다. 각각의 결과로 공존 현상은 다시 복원될 뿐이었다. 더욱이, 소련이 그 위성 국가들의 정치적 위기 —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1981년 폴란드 — 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은 선전 활동 외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소련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이를 방조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수동성이 경제적 영역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미국은 대규모의 경제적 재건설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는 서유럽에서, 이후에는 일본(남한과 타이완도 마찬가지)에서 냉전 분위기를 이용했다. 그 근거는 분명하였다. 세계 전체에서 유효 수요가 집적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토록 압도적인 생산력의 우위를 차지한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아가 경제적 재건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로 하여금 후견 국가의 의무 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런 의무감은 군사적인 동맹으로 기꺼이 편입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인 굴종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닌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구성 요소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1945년 직후의 시기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인기는 역사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우리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의 자유 선거에서 공산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잊고 있다. 남미 전역과 아시아(베트남, 인도, 그리고 일본)의 공산당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다. 중국, 그리스, 그리고 이란과 같이 자유 선거가 부재했거나 제한됐지만 공산당이 여전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이에 답하여, 미국은 거대한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유지했다. 돌아보면, 이 공세는 대개 성공적이었다. 소련이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진영에서 지도자 지위를 다진 것만큼, 워싱턴은 최소한 효과적으로 '자유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 둘, 다수의 베트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미국은 헤게모니 쟁취에 성공하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소멸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네 가지 상징으로 이해된다. 베트남 전, 1968년 혁명,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2001년 9월 테러 공격이 그것이다. 각 상징은 각기 그 이전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지는데, 미국이 최근에서야 깨닫게 된 상황 속에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권력이 결여된 외로운 절대 권력, 누구도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세계 지도자, 그리고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지구적인 혼란의 와중에 위험하게 표류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베트남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선은, 베트남인들이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 그들 자신의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인, 일본인, 미국인과 싸웠고, 결국 이겼다. 이는 실제로 대단한 성취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제3세계라 이름 붙여진 민중들에 의해 행해진 '알타 현상유지 체제'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이 싸움에 전체 군사력을 쏟아 붓고도 패배했을 만큼 워싱턴은 어리석었고, 그로 인해 베트남은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실상,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근시안적 우파 그룹이 오랫동안 비난했던 그 결정), 만약 사용하였다면 알타 합의의 기저를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핵무기 대량 확산을 저지르는 꼴이 되었을 것이며, 그런 모험적 결과를 미국은 감당할 수 없

었을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전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패배나 망신만은 아니었다. 이 전쟁은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힘을 유지하던 미국의 능력에 결정타를 날렸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고, 1945년 이후 풍부했던 금 보유고의 대다수를 써버렸다. 더욱이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이 같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약진을 이룬 그 순간에 그런 대가를 치렀다. 이런 조건들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를 종식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바로 이 3자 관계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특정 기간 동안은 한 국가가 다른 두 국가보다 나았으나 어느 한 나라도 나머지 국가들을 완벽하게 따돌리지는 못하였다.

1968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혁명에서 늘 베트남인을 지지한다는 수사가 주요한 구호로 떠올랐다. '하나, 둘, 다수의 베트남들', '호, 호, 호치민'이라는 구호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리에서 메아리쳤다. 하지만 '68세대'들이 미국의 헤게모니만을 비난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미국과 공모한 소련을 비난했고, 알타회담을 규탄하였으며, 세계를 두 개의 진영, 즉 두 개의 절대 권력 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 나누었던 중국 문화혁명의 언어를 채택하고 사용하였다.

소련의 공모에 대한 탄핵은 소련과 밀접하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의 세력에 대한 고발과 논리적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다수 전통적 공산권에 대한 비난이었다. 68혁명 세력들은 구좌파의 다른 요소들—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미국의 뉴딜 민주당—에도 흑평을 퍼부었는데, 혁명세대가 총칭 '미국 제국주의'라고 명명한 것과 공모한 혐의로 비난을 던졌던 것이다.

소련과 워싱턴의 연합에 대한 공격에다 구좌파에 대한 비판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창출한다는 데 합의했던 알타회담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유일하고 정당한 전 세계적 이데올로기라는 중도 자유주의의 입장을 훼손시켰다. 1968년의 세계적 혁명이 가져온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는 미미했지만, 그 지정학적·지적 반향은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1848년 유럽 혁명 이후 권좌를 차지했고, 보수와 급진을 담합시켰던 중도 자유주의가 위력을 잃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과거로 되돌아가 다시 한번 전 영역에서 실제적인 선택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보수주의자들로, 급진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들로 자리를 굳혔다.

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무시하는 쪽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 2001년 9월 11일까지는 퇴각하는 정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주요 국가들과 국제 기관들의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대처와 레이건 제임,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등장함으로 인해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로 점철된다. 한때(한 세기 이상) 보수주의 세력이 스스로를 보다 현명한 자유주의자로 조명하려고 시도했던 곳에서 이제 중

중도 자유주의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수가 줄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지—반파시즘, 반공산주의, 반식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보다 희미해지고 설득력을 잃어갔다.

초강대국 미국이 굴욕을 당했던 베트남 전쟁

도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좀더 효율적인 보수주의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보수주의의 프로그램은 분명했다. 국내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노동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들에 대한 환경 규제를 최소화하며, 국가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렇다할 성과가 거의 없자, 보수주의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국제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다보스에서 있었던 ‘세계경제포럼’ 회합은 엘리트와 미디어 사이에 만남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IMF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인사들의 클럽 자리를 만들어 준 셈이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창립해서 국가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 무역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이 주목하지 않는 동안 소련은 붕괴하고 있었다. 그랬다.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에 ‘악의 제국’이라는 악명을 덧씌웠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호소하는 미사여구를 남발했지만 미국이 이를 정말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물론 소련의 붕괴에도 책임이 없다. 사실상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붕괴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구좌파에 대한 대중적 환멸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알타 체제를 청산하고 국내에서 자유화 조치(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제도화해 정권을 유지하려 애쓴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알타 체제를 청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련을 구하지는 못했다(거의 구할 뻔했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

미국은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 놀라고 당황하여, 결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의 붕괴를 의미

힘없는 초강대국

1970년대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는 미국의 권력에 두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경기 침체는 당시 집권 구좌파의 주된 이데올로기적 주장이었던 ‘개발주의’—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한다면 모든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개념—를 붕괴시켰다. 구좌파 정권들은 하나 둘 내적 혼란에 직면하였고, 생활수준의 하락을 보았으며,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한 채무 의존도를 증가시켰고, 신뢰성을 침식시켰다. 1960년대 미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여겼던 제3세계 탈식민화—개발주의적이지는 않지만 혁명적이지는 않은 세력들이 거의 분열을 겪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은 질서 붕괴, 끓어오르는 불만, 감당할 수 없는 급진적 정서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미국은 이에 개입하려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1983년,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레바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미군은 사실상 레바논에서 쫓겨났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이건은 군대 없는 국가인 그레나다를 침공하였다. 대통령 조지 H W 부시는 또 다른 군대 없는 국가인 파나마를 침공하였다. 하지만 부시가 소말리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개입한 이후, 미국은 다소 불명예스럽게 사실상 쫓겨났다. 미국 정부는 몰락해가는 헤게모니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

했다.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대상이 소멸된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했던 세력도 그런 정당화 논리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당성의 상실은 즉각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졌다. 알타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감히 이런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뤄낸 휴전은 전쟁 전과 똑같은 경계선을 짓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패권 국가가 중동 지역의 한 평범한 국가와 벌인 전쟁에서 무승부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후세인은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도 무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후세인의 당돌한 도전은 베트남전의 실패보다 더한 방식으로, 특히 매파라고 알려진 미국의 우파들의 내장을 갈아먹었다. 그들이 현재까지도 이라크를 공격해 후세인 정권을 파괴하려고기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걸프전과 2001년 9월 11일 사이, 주요한 국제적인 갈등이 벌어진 두 곳은 발칸반도와 중동이었다. 미국은 두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돌아보면, 미국이 완벽하게 고립주의 입장을 취하였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발칸반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다민족 국가 유고슬라비아가 붕괴했고 결국엔 여러 국가들로 갈라

졌다. 10년 넘게 이 국가들은 인

종 청 소

(ethnification) 과정을 겪으면서, 대부분 끔찍한 폭력과 인권 침해, 노골적인 전쟁을 경험했다. 미국이 주도한 외부 개입으로 휴전이 성사되고 가장 끔찍한 폭력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 개입은 인종 청소를 결코 역전시키지 못했다. 인종 청소 결과는 이제 확실히 굳어졌고 다소 정당화됐다. 만약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분쟁들이 다른 결말을 맞았을까? 폭력은 좀더 오래 계속되었을 것이지만, 기본적인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중동의 그림은 훨씬 더 냉혹하다. 미국이 훨씬 깊게 개입했는데도 실패는 보다 두드러졌다. 발칸에서든 중동에서든 미국은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영리한 매파

그리고 '9·11 사태'가 터졌다. 충격과 반응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게 비난 세례를 받은 중앙정보국(CIA)은 부시 행정부에 가능한 위협들을 이미 경고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IA가 알 카에다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 실행을 미리 예측할 수는(그리하여 방지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CD 국장 조지 테넷은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증언이 미 정부와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가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판단을 내리건 간에,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은 미국의 권력에 중대한 도전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커다란 군사적 세력은 아니었다. 그들은 비국가 군대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한 약소국에서, 강력한 과단성과 약간의 돈, 헌신적인 추종자 무리, 그리고 강한 기반 정도를 지녔을 뿐이었다. 간단히 말해, 군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 땅에 대담한 공격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클린턴 정부의 해외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클린턴의 방식이 제랄드 포드에서 시작하여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까지 포함한 모든 미국 대통령들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려(은명 알고는 있겠지만) 들지 않았다. 그 방식은 현재 부시 행정부가 9월 11일 이전까지 택하였던 방식이기도 했다. 2001년 4월 부시가 중국에 추락한 미국 정찰기 반환 문제를 처리한 방식만 보아도 신중함이라는 것이 이 게임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에 부시는 진로를 변경해

9·11 공격 :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낳은 쓰디쓴 결과

서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민들에게 “결과는 명백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세계에 “미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선포하였다. 가장 보수적인 미 행정부에 대해서조차 오랫동안 좌절감을 느껴 왔던 매파들이 마침내 미국 정책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매파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휘두른다는 것. 수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의 무력 사용을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그 뜻을 확고하게 세워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꿈쩍할 수 없을 뿐더러, 꿈쩍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매파는 미국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제국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첫번째는, 미국이 그렇게 해도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만약 워싱턴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에 미국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매파의 입장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맹공을 펼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교살하려는 이스라엘을 사실상 지원하며, 보도에 따르면 군사적 준비 단계에 있다는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다. 2001년 9월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1년도 안 되어 그런 전략들이 어떤 성취를 이룰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지금까지 그 계획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 전복(알 카에다를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지 못했고 지도자들을 생포하지도 못했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엄청난 파괴(이스라엘의 샤론 총리의 말과 달리,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라파트를 무력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라크 침략 계획에 대해 유럽과 중동 지역 미국 동맹국들의 심각한 반대로 이어졌다.

매파는 최근의 사태들을 읽어내면서 미국이 취한 행동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긴 하지만 대개 말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서유럽도, 러시아도, 중국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심각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유대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달리 말해 매파는 워싱턴이 사실상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행동해 왔다고 믿는다. 매파는 미국 군대가 실제로 이라크를 침공해도, 그리고 그 뒤 미국이 이란, 북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권위를 행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매파의 판단이 주로 국제 좌파의 판단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제 좌파는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비명을 질러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미국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파의 해석은 틀린 것이고, 미국의 몰락에

이바지하게 될 뿐이며, 점진적인 하강을 훨씬 더 급속하고 격렬한 추락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파의 접근방식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인해 실패할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군사력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이자, 사실상 단 하나의 카드로 남아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공할 만한 군사 기구를 지니고 있다. 대항할 수 없을 만한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개발했다는 최근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면, 현재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세는 10년 전에 비해 월등히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재빨리 정복하고는, 친미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을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1945년 이후 미군이 치렀던 세 차례(한국, 베트남 그리고 걸프전)의 격렬했던 전쟁을 염두에 뒀야 한다. 하나는 패배하였고, 나머지 둘도 영광스러운 기록이라 할 수 없는 무승부로 끝났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탈레반의 군대가 아니다. 그의 내부 군대 장악은 훨씬 더 응집력이 있다. 미국의 침공은 반드시 심각한 지상 병력 투입을 필요로 할 것인데, 지상군은 바그다드로 진군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며 상당수의 사상자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무력은 또한 부대 집결지를 필요로 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쿠웨이트나 터키가 도움을 줄 것인가? 워싱턴에서 현금을 모조리 동원하면 가능할지 모른다. 반면 사담 후세인은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할 것이며, 어떤 위험하고 성가신 무기들이 동원될 지에 대해 초조해지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미 정부쪽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정권들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모든 일이 미국의 뿌리 깊은 반아랍적 편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영국 참모부는 토니 블레어 수상에게 이길 것 같지 않다고 명백하게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언제나 ‘두 번째 전선’이란 문제가 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전군은 동시에 두 군데서 벌어지는 지역전의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얼마 후, 국방성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 전략을 조용히 폐기하였다. 하지만 미군이 이라크전에 빠져있을 때, 또 다른 적군이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미국 국민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지의 문제도 고려해 보라. 미국인들은 전시에 모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애국적 열정과 뿌리깊은 고립주의 욕구 사이에서 왔다갔다한다. 1945년 이후 애국

십은 사망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벽에 부딪혔다. 지금의 반응이라고 다들 것이 있겠는가? 매파(대다수가 민간인 출신인)가 여론에 둔감하다 하더라도, 베트남전에서 당했던 미 육군 장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전선은 또 어떤가? 1980년대 수많은 미국의 분석가들은 일본의 경제 기적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1990년대 일본 금융 부문의 어려움을 보고 진정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였는지 과장을 일삼던 미국의 권위자들도, 일본이 경제 지체로 한참 뒤처지자 이제 자기 만족과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인다. 요즘 워싱턴은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훈수하는 데 오히려 더 열 올리는 것 같다.

이런 승리주의는 별 근거가 없는 듯하다. 2002년 4월 20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다음 기사에 대해 생각 해보자. “한 일본 연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 기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20대의 자료 처리 능력과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고 이전에 IBM이 만든 기종을 훨씬 앞지른다. 이번 성취는 대부분의 미국 엔지니어들이 손쉽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경쟁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분석은 다음 말로 이어진다. 두 나라는 ‘과학 기술을 응용하는 우선 순위’가 서로 다르다. 일본의 기계는 기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국 기계는 무기를 모의실험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런 대조는 헤게모니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 준다. 지배적 세력은 (손해가 있더라도) 군대에 힘을 쏟고,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경제에 정신을 쏟는다. 후자가 항상 막대한 보상을 받았다. 미국도 그랬다. 일본도 똑같이 보상받지 말란 법이 있는가? 특히 중국과 동맹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있다. 지금 당장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매파의 전략에 들어갈 터무니없는 군사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더욱이 워싱턴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매파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거나 지지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은 워싱턴에 직접적으로 반기 들기를 망설이거나 꺼리고 있지만, 그들의 미온적인 태도 그 자체가 미국에는 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거만하게 팔을 뻗는 것에 그치고 있다. 오만은 반대급부를 가진다. 현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다음 차례에는 동원할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명스런 복종은 원한만 늘릴 뿐이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상당한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신용을 획득해 왔다. 그러나 요즘 미국은 1960년대 금 보유를 탕진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런 신용마저 소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두 가지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매파의 길을 따라서 매파를 제외한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부정성이 너무나 막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최근 <가디언>의 사이먼 티스달(Simon Tisdall)은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한다 해도 “미국이 혼자이라크 전쟁을 수행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공급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부시는 말은 거칠게 하면서도 힘은 못 쓰는 신세가 돼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후 퇴각해야만 한다면, 더더욱 무력해 보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선택은 극단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다음 10년 동안 국제적 문제들에 지니게 될 결정적인 힘은 점점 줄어들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저물고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미국이 품위 있게, 그리고 전 세계와 미국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면서, 권좌에서 내려오는 방식을 고안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주한 미군 반대 운동의 미래에 관한 단상

독일 좌파 저널리스트이자 독일의 진보지 <타게스 차이팅> 등에 한국 소식을 기고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칼이 미군의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과 관련한 글을 <다함께>에 보내 왔다.

부시 정부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동안 미국 언론은 한국에서 벌어진 주한 미군 반대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한편, 운동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야의 밤에도 10만 명이 주한 미군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단 몇 주 전만 해도 이 항의 시위는 민주노동당이나 한총련 같은 몇몇 정치 조직들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 사이에 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감정·분노·항의를 표현하는 방식과 시위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한 첫번째 촛불 추모회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주한 미군 반대 운동을 진정한 대중 운동으로 바뀌 놓았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진정한 민주적 대중 운동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칭 전위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미국과 한국의 지배 계급은 이러한 사태 발전이 못마땅했다. 그들은 이 운동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더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주의란 것이 우리가 4년이나 5년마다 투표 용지에 기표하고 그들의 임기 동안 일 다 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노무현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운동을 중지시키려고 했다는 데 우리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2월 24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논평에서 그들은 미군 반대 운동을 구태의연한 반미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공격을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운동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대중 운동을 중지시키는 흔한 방법은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 지배 계급 언론은 이 운동이 반미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또, 그들은 “평범한” 시민들과 정치 활동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세계화와는 다른 우리의 대안은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분명한 국제주의다. 우리는 강대(실제로는 전혀 그렇

지 않다)국이 약소(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일부다. 더 많은 힘과 창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평화적인 우리 운동은 전 세계의 반제·반전 운동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도쿄에서 서울, 로마, 베를린, 파리를 지나 워싱턴과 로스엔젤레스에 이른다. 이것을 “선의 축”이라고 부르자.

국제 연대의 좋은 징조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도 우리의 적들은 시위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과 정치 활동가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한국의 도로를 점거한 이후 스스로 능동적인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다. 정치 활동가들은 이제 갓 운동에 뛰어든 대중에게 창발성·자발성·상상력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은 정치 활동가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단결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분열하면 우리는 당장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당

운동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기성 정당들만을 이름게 할 뿐이라고 크리스 하먼은 주장한다.

크리스 하먼

크리스 하먼(《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갈무리),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민족 문제의 재등장》(책갈피)의 저자)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 포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흥미진진한 모임 가운데 하나는 ‘당과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축구장만한 홀에 5천 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그것은 여러 모로 ‘당과 계급’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이 되풀이된 것이었다.

이런 논쟁은 새로운 대중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견고한 정치 조직들이 운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한다. 이런 우려는 사회민주당이나 스탈린주의 정당의 손에 운동이 이용당한 오랜 경험 때문에 더욱 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진정한 대중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매우 다른 견해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 방침을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먼저 시위나 파업을 제안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행동에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제3의 인물은 권력자들을 믿으며 아무 행동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운동은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자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운동을 안에서 보면 거기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려는 수많은 개인들의 시도가 들어 있다.

게다가, 운동이 발전하면서 운동의 진로에 대한 특정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상을 표현하는 비공식적 조직들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자생적으로’ 시작한 많은 위대한 대중 봉기는 조만간 서로 경쟁하는 경향들로 양극화했다: 프랑스 혁명에서 지롱드 파와 자코뱅 파, 차티스트 운동에서 ‘물리력파’와 ‘도덕파’, 제1차세계 대전 말의 혁명기에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운동에서 ‘유러코뮤니스트’, ‘게바라주의자’, ‘마오주의자’, 다양한 종류의 트로츠키주의자. 설사 운동 내에서 사람들의 분열이 분명한 목적·계획 없이 되는 대로일지라도, 사실상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운동 내의 분열은 결코 임의적이지 않다. 기성 사회의 압력 때문에 그 속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는 분열이 구조화된다.

우리는 모두 기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의식에 뿌리 깊이 배어 있다. 그럼에도 지적했듯이, 흔히 말하는 ‘상식’은 이런 관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 가정 가운데 일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가정 전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훨씬 더 흔하게는, 일부에 대해서만 의심하고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받아들이거나, 체제의 일부에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체제 전체에 맞서 싸울 수는 없다고 믿는다. 개량주의 정치 — 기성 체제의 제도를 이용해 체제를 개혁할 수 있다는 믿음 — 는 이런 ‘모순적’ 의식의 논리적 결론이다.

시에틀 시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운동도 이런 전반적 패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운동에는 자본주의를 증오하는 배짱 두둑한 혁명가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혁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많은 계획들에 이끌린다 — 생산의 ‘현지화’, 자유무역 원칙에 따른 유럽의 식료품 시장 개방, IMF의 개혁, IMF를 유엔개발위원회(UNCD)로 대체하기, 기성 국가에 압력을 넣어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고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해 위기를 막기, 일부 다국적 기업과 동맹을 맺어 다른 다국적 기업을 반대하기, 30년 전처럼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직접 지도하는 형태로 신자유주의를 되돌려놓기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비공식적이고 조직돼 있지 않은 다양한 개량주의 ‘정당들’이 운동 안에서 출현했다. 그리고 공식적이고 고도로 조직돼 있는 다양한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 옆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정당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기구와 광범한 지지망을 통해 운동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운동에서 ‘정당들’을 막는다고 해서 개량주의 정당들이 운동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

다.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에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기성 정치 제도들에 영향을 미쳐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할 것이다. 토빈세를 바라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드골주의자인 슈벤느망에게 투표하거나(아타의 지도자 베르나르 카상이 그랬듯이), 적어도 ‘복수 좌파’ 정당들에 투표할 것이다(대부분의 운동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당 배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정당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과 그 개량주의적 산물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는 정당들이다 — 혁명 정당. 1918년 독일 혁명 때 ‘정치인들’은 노동자 평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좌파 지도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치인’ 배제는 군부와 협력해 노동자 평의회 권력을 파괴하고 있던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1월에 있을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은 정당들의 공식 대표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브라질 노동자당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새 대통령 룰라가 연설함으로써, 이 행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지도’와 ‘지배’라는 말은 종종 혼동되곤 한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기성 사회는 오직 대중의 자주적 행동을 통해서만 대체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혁명가들은 지배에 아무 관심 없다. 우리는 한무더기의 쓰레기를 또 다른 쓰레기로 바꾸려는 게 아니다. 모든 대

“당과 운동”은 피렌체 사회포럼에서 가장 뜨겁고 흥미진진한 토론 가운데 하나였다.

중 투쟁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운 자발성을 보여 준다.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조직 방식을 만들어 내고 자기 주위의 세계를 바꾼다. 그러나 낡은 찌꺼기는 마술처럼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혁명적 대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옛 국가 기구와 개량주의 정치인들에게 의지한다. 우리는 투쟁을 한층 밀고 나가기 위해 자발성을 일반화하려 한다. 그러나 여전히 늘어붙어 있는 찌꺼기 — 여성 차별, 유색인종 차별, 권위주의에 굴종하기 — 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다양한 개량주의 세력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운동을 고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한다는 의미에서 지도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첩함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 계급과 그들의 중앙 집권화한 국가를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민첩함과 규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 개량주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당 반대’ 구호 뒤에 숨지 말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사상을 설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운동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운동 안에서 상이한 사상의 상호 작용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하고 싶고 사람들을 우리 주장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다. 그리하여 새로운 활동가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다. 

자율주의자와의 토론

반자본주의 운동은 전쟁과 국가 탄압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루카 카사리니(Luca Casarini)와 앨릭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

루카 카사리니는 이탈리아 '투테 비안체' 운동의 유명한 활동가다. 앨릭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이자 반신자유주의 단체 '글로벌라이즈 리시스턴스' 소속 활동가이다.

앨릭스 캘리니코스 : '투테 비안체'와 국제사회주의 경향에 속하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프라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제노바에서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투쟁과 저항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좌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싶어합니다. 전쟁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미 그 전인 제노바 시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운동 전략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카 카사리니 : 지금 '투테 비안체'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단은 자율주의자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건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율주의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정치적 경험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과 언어를 바꾸고, 투쟁 방식뿐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과 연관 맺는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투테 비안체'의 경험은 중요했습니다.

제노바에서 '투테 비안체'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충돌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시민 사회에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커다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파티스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확장해 합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발전시킨 것 중 하나가 시민 불복종 개념입니다. 즉, 한데 불러모으고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복종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군인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전위도 아닙니다. 불복종이라는 이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채택해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들에 참여해 그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구 좌파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거나 전위 세력이 되고자 하는 낡은 방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취하려는 방식은 개입하고 논쟁하는 실천입니다.

제노바 시위 이후 '투테 비안체'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투테 비안체'는 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노바 시위는 우리가 더 이상 흰옷을 입지 않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슬로건, 우리의 전망과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사회포럼이라는 연합체 내에서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영역을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사회적 불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불법의 문제입니다. 모든 대중 운동은 어느 지점에서는 불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앨릭스 캘리니코스 :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요소들이 오늘날의 상황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의 타락한 스탈린주의적 왜곡이라고 보는 것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개념이라는 마르크스 자신의 핵심 정치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에 개입할 때 우리는 자주적인 활동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싸우도록 고무합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우리와 '투테 비안체'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국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 문제입니다. 제노바는 자본이 아무리 세계화하고 분권화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집권화한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의 군사적 양상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연설이나 저작에서 '다중'(multitude), '탈집중화'(분산 또는 분권화), '차이' 등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최근 저작인 《제국》에 나온 개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탈집중화한 네트워크적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앙집권화한 권력과 싸우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테러리즘처럼 제외해야 할 해결책도 있습니다. 적색 여단의 역사 전체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군사적 해결책을 추구했다면 분쇄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지도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전위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전위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전위라는 것이 노동 계급 운동을 선거 운동의 재료쯤으로 여기는 공산당식 태

도나 노동 계급은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데 스스로 노동 계급의 전위라고 자처하는 다른 극좌 조직의 예를 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테 비안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위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당신에게 기대할 뿐 아니라 당신의 제안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의견 불일치가 있고, 대중 매체와 지배 계급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운동 내에서도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용어가 연상시키는 부정적 관념 때문에 전위 운동을 자칭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 지도라는 사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도는 운동 내에서 그 운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토론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컨대 '투테 비안체' 같은 구실을 운동 내에서 하게 된다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당신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카 카사리니 : 먼저 지도와 전위에서 시작해 보기로 하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따르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일 중 하나는 모순을 이용해 사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 단계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운동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도에 관해 얘기한다면 새로운 맥락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의 지도라는 맥락에서 지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인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나는 네트워크가 단일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많은 중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는 일시적으로 중심을 가지면서 나머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 내의 최상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를 표현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는 오직 일시적일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도가 일시적일지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며,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종의 지도를 보여 주어야 하지만, 그 지도가 네트워크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잡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분명하고 다 드러난 문제점만 가진 대중(masses) 대신에 다중(multitudes)을 결집시키는 그런 복잡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위주의와 대중을 극복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노바 시위 때 블랙 블록(Black Bloc)은 일종의 전위주의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대중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행동한다면 운동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헤게모니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권력과의 충돌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최근에 약한 사고라는 또 다른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권력과 체제로부터의 분리, 따라서 충돌에 관한 모든 가설의 종말을 뜻합니다. 이 관점은 1970년대의 패배에 대한 개량주의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혁명적 해결책은 충돌이 없는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애틀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 문제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제기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모든 쟁점들을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초래한 이 거대한 세계적 변화는 우리가 자국 내에서 거대한 변형 — 예를 들어 우리의 국민국가와 세계 체제 사이의 변화 — 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노바에서 우리가 본 것은 군사 국가나 이탈리아 국가나 또는 이탈리아 경찰이 보인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와 마찬가지로 제노바에서도 이탈리아 국가는 세계 체제의 부속물이었을 뿐입니다. 보통 스웨덴에서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노바에 있던 경찰이 블레어와 부시의 허락 없이 그러한 것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블레어와 부시가 방향을 잡아 주었고, 베를루스코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제1세계 안에서도 일부 초국적 구조들이 국민 국가들에게 특정 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경제 국경이나 무역 장벽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륙의 블록화나 유로화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대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미국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 이런 식의 견해는 그 논리적 결론까지 따지고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를 단순히 시장과 관련된 현상이나

아니면 제국주의적 다국적 국가들로의 거대한 복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 착취의 새로운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삐 풀린 자유 시장과 모든 형태의 케인즈주의의 종말인 켄처주의 국면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에게 정치적 정부와 정치적 통제가 필요했던 그 다음 국면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 없는 시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은 1999년 시애틀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열강의 지도자들이 이 세계적 변화의 행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제노바 시위 전부터 이 국면은 제노바에 이르러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강들의 정상 회담에 이어 거대한 운동이 탄생했고 이 운동 때문에 정상 회담이 더는 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켈커타나 카불이 아니라 시애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혁명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칼 마르크스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면이 종말을 맞이한 것은 1995~1996년부터 자유주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공격받지 않았다면 이 국면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세

게 지도자들이 세계적 정치 지도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이 세번째 국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서 매우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는 세계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당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공정한 문명으로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공정한 문명이란 말은 윤리적 개념입니다. 현재 그들은 팔레스타인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반테러 클럽을 창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윤리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격이자 책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적이기보다는 제국적인 방식입니다.

앨릭스 캘리니코스 : 과거와의 연속성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이 존재합니다. 주요 자본주의 열강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개입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특정 국민국가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카르텔을 대신해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제노바에서 카바리니에리는 이탈리아 우파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를 대신해 총을 쏘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이 시작된 때는 9·11 사건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인도주의적 전쟁'은 코소보였고, 특히 블레어가 분명하게 밝힌 생각은 경제적 세계화에는 정치적 세계화가 필요하며 주요 국가들은 그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소보는 블레어 말대로 보편적 가치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없는 나라들이 보편적 가치의 이름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나는 하트와 네그리가 《제국》에서 내놓은 분석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는 국가간 충돌의 정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은 세 지역 블록에 관해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이들 세 블록의 지도자로 자처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유럽 통합 과정에 깊이 연루돼 있고, 또한 아시아의 아펙과 아시아-태평양 경제 포럼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서로 다른 세 국제 기구들을 자국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개성적이고 탈집중적인 제국으로 증발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권력 중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명히 위기는 바로 그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지배자들은 '무한 정의'나 '항구적 자유'처럼 보편적인 가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분명히 미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떤 형태의 군사 작전일지라도 미국의 국가 권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다자간 구조에 종속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맨해튼이 파괴되고 펜타곤이 폭탄 테러를 당한 뒤에 미국은 가능한 한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권력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나는 방금 언급한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본가 계급 내의 충돌과 그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가 계급 분파들이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라는 영역을 넘어서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기성 체제의 여러 부분이 중국을 커다란 경제적·전략적 위협 세력으로 보고 중국을 봉쇄하고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1914년이나 1945년 때의 제국주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세계는 여전히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가진 서로 경쟁하는 중심들로 분열돼 있다는 점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는 하트와 네그리의 주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조직과 지도의 문제를 얘기해 보기로 하죠. 나는 때때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애틀에서 시작된 운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활동하는 방식은 불과 4~5년 전의 방식과도 사뭇 다릅니다. 이 운동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운동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치 경향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도할 권리를 획득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지도할 권리를 선언하거나 과거의 활동에 근거해서 지도권을 요구하는 조직이나 정치 경향은 살아 있는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우리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루카 카사리니 : 나는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제국과 제국주의에 대한 논평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것은 대부분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제국 개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국은 그 안에 제국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하나의 실재라기보다는 경향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어떤 것도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센터 사건 이후 케인즈주의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폭격 전에 먼저 국제적인 반테러 클럽이 구성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쟁은 자본주의 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일상의 정치 활동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입장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위와 대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의 반자본주의 운동이 개량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는 또한 방금 논의했던 모든 과정들 속에 커다란 모순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사상뿐 아니라 체제에 관한 보편적 사상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제1세계 · 제2세계 · 제3세계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세계화 논의에서 또 다른 주요 쟁점인 끊임없는 세계적 전쟁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이 운동은 전쟁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주로 시장, 시장의 정치적 지배, 그리고 금융과 화폐에 대해서만 논쟁해 왔습니다. 이 토론들은 군대에 관한 매우 기본적인 논의를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끊임없는 세계 전쟁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과정들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사파티스타 지도자인 마르코스가 지적한 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네번

째 전쟁, 즉 끊임없는 전쟁 상황으로 저장도 전쟁을 들었습니다. 이런 정식화는 현재의 전쟁 물의를 이해하고 평화 문제를 다루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런 정식화는 평화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세계적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면 평화의 문제도 완전히 재고해야 하기 때문이고,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장도 전쟁의 측면에서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앨릭스 캘리니코스 : 우리가 제1세계 · 제2세계 · 제3세계라는 구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1989년 이래로 평화는 부유한 국가들에만 한정된 것이었고 세계의 나머지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1998년 이래 콩고민주공화국은 전쟁을 겪어 왔습니다.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거대한 부를 이루고 있는 자원의 통제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백5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3분 간의 묵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맨해튼에서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잔혹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건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일어나던 전쟁이 체제의 중심부로 흘러넘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지배 계급은 이런 사건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내서 체제의 중심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 모든 전쟁들과 체제의 구조 사이의 관계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에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시애틀은 코소보 전쟁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운동은 처음에는 전쟁과 제국의 권력에 대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진정한 시험대는 효과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제국주의 운동이 왜야 한다는 점을 이 운동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타난 조짐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소보 전쟁이 시애틀 바로 뒤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이 쌓

이면서, 특히 예테보리와 제노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단지 돈뿐 아니라 총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이 운동이 단지 지지 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를 심화한다는 면에서도 훨씬 강력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군비 지출 확대를 수반한다.

벌써부터 뒷걸음질치는 노무현의 개혁

“부시 대통령과 나는 세대가 비슷해 같이 만나면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반미는 극히 적은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주한 미군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취임 전에 주한 미군을 방문해 격려할 [것이다].”

제임스 켈리와 만나 노무현이 한 말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올라가면 나도 좋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면, 웬지 나도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무현

“내가혁명을 하려는 것도아닌데 왜 자꾸 재계와 싸움을 붙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한-미 공조냐 민족 공조냐를 나눌 생각이 없으며 나는 실용주의자[다]. … 한-미 동맹 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임기 5년 중 바꿀 수도 없다. … 나는 반미할 생각이 없다.”

“나는 한때 군비 축소에 솔깃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생각이 달라졌다. … 군비 축소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다].”

“일부 반미 정서를 지닌 사람들에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노무현, 1월 9일

서울국제포럼 간담회 연설에서

“한미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게 기본이다. … [SOFA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엔 제기할 것 같은 느낌이 없다.”

노무현의 대미 특사정대철

“특감이 실시되더라도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수위 관계자, 조중동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조치에 대해

“언론은 행정 개혁과 달리 민간 부문인 데다 언론 자유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함부로 해선 안 될 것 [이다]. … [언론 개혁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인수위 위원장 임채정이

1월 8일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10대 국정 과제에 ‘언론 개혁’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해명하며

“[재벌 개혁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단계적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기업 경영에 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뜻 [이다].”

“4대 부문 개혁 중 … 공공과 노사 부문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으로 안다.”

인수위 부위원장 김진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전력 등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이다].”

1월 10일에 인수위 관계자가 한 말

“새 정부 경제 브레인들과 재계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 이를 통해 기업 입장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정착됐으면 한다.”

노무현 쪽 인사들과 재벌들간 만남이

있따라 잡힌 것을 두고

전경련 고위 관계자가 한 말

“나는 인적 청산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이 민주당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에 반대하며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랐다. … 집사람이 이씨를 청와대에서 집안 일을 챙기는 개인 비서로 쓰기로 한 마당에 인수위 사람들과 얼굴도 익히고 업무도 배우게 하려고 데려 왔다.”

처조카 딸의 사회문화여성분과

사무요원 임용이 구설수에 오르자

노무현이 한 말

홍영표 개혁국민정당 사무총장 대행 인터뷰

정리 정진희



Q. 개혁국민정당의 창당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지난해] 8.8 재보선이 끝나고 노 당선자의 지지도가 가장 밀바닥이던 8월 초는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수·정치인·원로 인사들과 함께 노무현 국민후보지키기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시작했는데 검토하는 과정

에서 개혁국민정당형태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대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정치 개혁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8월 23일에 창당 결의를 하고 8월 29일 홍사단에서 정식 공개 토론회를 거쳐 만 들었습니다.

Q. 개혁국민정당이라는 당명에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개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정당은 자신의 정책과 강령을 통해서 어느 계급·계층을 대변하느냐를 보여 주는데 저희는 솔직히 아직까지 정책이 없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히 탄생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원들 다수가 폭발적으로 모인 과정을 보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내용 하나에 공감했던 거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부패한 정치권이었고, 저희는 이것을 극복하는 핵심 내용을 “정당 혁명”으로 봤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치 개혁을 중심 과제로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면 올해는 정당 개혁, 낡은 정당을 청산하는 것이 1차 과제 같습니다. 저희 당은 민주노동당처럼 계급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급 연합·계급 연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변화 열망을 모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급연합이랄까 계급 연대에 맞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개혁국민정당은 계급 정당이 아니라 “계급 연합·계급 연대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당명에도 ‘국민’이라는 말이 있고 강령에 나온 4대 조직 구성 원리에도 ‘국민 통합’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해 관계가 다른 사회 집단이 있는데 ‘국민 통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A. 저희 당이 창당할 때 내세운 ‘국민 통합’의 핵심 내용은 지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사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당이 민의를 왜곡해 온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해 오면서 절감한 게 노동자들도 고향 따라 표를 찍더라구요. 대공장에서 소수의 선진 노동자를 제외하고 영남 출신은 영남 후보 찍고, 이런 게 투표 관행이었습니다. 계급성에 기초해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선진적 형태의 정당 문화라면 우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을 내세운 겁니다. 계급, 계층간의 통합까지 생각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Q. 지역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A. 지역주의는 노무현 후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번 선거가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을 수구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내에서 노무현 같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 당선자가 단순히 영남권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좀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우리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 개혁으로 분화돼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2004년 총선에서는 보수와 개혁 구도로 나뉘고

또, 민주노동당도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극복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민 통합'은 원래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하셨더니, 그럼 이해 관계가 다른 계급 간에는 어떻게 "계급 연합·계급 연대"가 가능할까요?

A. 1991년 동구권이 붕괴할 때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5월에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 분신 투쟁으로 열사들이 많이 죽었고 8월에 소련이 몰락하는 것을 감옥에서 봤습니다. 1985년에 대우자동차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했는데 제가 감옥에서 나와 민주노총 준비위 활동 3~4년 할 때까지도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노동조합 설립 활동 투쟁, 이런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 운동이 임금 인상을 기초로 하는 경제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정치 세력화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계급 이기주의나 이런 데 고립돼 어려워지지 않겠다' 하는 문제 의식을 막연하게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백기완 선본 때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저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진보 정당의 운동이 결국 전체 국민들에게서 고립된 운동을 해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 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자본가 편에 선 것이고 신자유주의를 전면 거부해야 노동자 편에 선다, 전 이런 식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오는 부작용, 노동자·서민·중산층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장 경제가 현실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시장 경제를 전면 부정하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에서 내거는 요구 가운데 정치적인 요구가 많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보면 이것은 정치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정치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운동도 현실 정치 속에서 힘을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힘은 결국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 정당으로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힘을 키워 나가는 건데, 저는 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Q.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폐해를

극복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정리해고제 도입을 인정하고 그 폐해를 문제 삼는다면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예를 들어볼게요. 대우자동차가 1998년에 워크아웃됐는데 당시 정부와 채권단이 회사를 구조조정하면서 회사를 개혁했으면 정상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철저하게 진행되면서 회사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기업화·국영기업화를 주장했는데 저는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회사 자체의 역량만으로 소생할 수 없는 데다 공기업이라는 모델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으로 만들면 엄청난 정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시 국민들이 공적자금 투입하는 데 엄청 반대했을 때 아닙니까? 회사나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해야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노조하고 정부·채권단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회사는 아마 3백 명 정도 일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하고 1년쯤 리턴하는 걸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서 부도가 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도 안 되고 밀바닥까지 가서 해외 매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공기업화가 옳은가 하는 문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당시에 1천7백 명이 해고되지 않고 좀더 좁은 범위에서 하거나 혹은 좀더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정리해고를 한 명도 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그것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1천7백 명 해고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신자유주의가 현실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싸운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과연 옳은 것인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그만한 입법이나 단위 사업장 투쟁 때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우리들이 좀더 현실적인 정치세력화의 대안들을 갖고 노력해 왔다면 충분히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모아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1987년부터 시작했으니깐 15년입니다. 정권의 탄압이 혹독하고 굉장히 어려웠다 해도 '15년 동안 진보 운동이 이 정도밖에 이번엔 큰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없는 것은 왜일까?' 하는 물음을 던져 봐야 합니다.

Q. 대우차 채권단이 노동조합에 해고 동의서를 쓰라고 요구할 무렵, 김우중은 해외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기업 부실

노무현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전 대표

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고 많은 돈을 빼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불평등한, 부당한 대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우차 해외 매각 때 GM에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매각했습니다. 해외 매각하더라도 어차피 국가가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 하는 것이라면, 왜 공기업화는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대우 부실의 책임이 기존 정치권·재벌의 총체적인, 그동안 70년대의 경제 성장에 의해 누적된 모순들이 폭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정말 국가적으로 언어야 할 교훈도 제대로 못 얻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정경 유착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회사안쪽에서 보면 자본, 기술, 판매력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계속 쏟아 부으면 정상화될 수 있는 나, 그렇게 안 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상황은 전문가들이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소생하기 대단히 힘들, 심지어는 경제 논리로 봐서는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Q.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98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 법안을 수용한 결과 현장에서 반발이 있었고 노조원들 사이에서 노사정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탈퇴한 건데, 그 동안 노사정위에서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된 과정을 봐도 민주노총이 요구한 원래 안보다 후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큰데, 왜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제가 유럽에서 살다 보니 주5일제 해도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의 문제로, 정부·자본가·사용자 단체·노동자가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저는 노사정 위라는 형식 자체가 우리의 기존 노사관계에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방식에서 전환하는, 점진적인 어떤 형태의 발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노 당사자의 노동 정책을 맡으면서 노사정을 사회적 협약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의 기구가 아니고 합의한 사항이 사회적 협약으로까지 존중되는, 노사정위의 결정이 존중되는 그런 기구로 격상되면 말입니다. 당시에는 노사정위라는 틀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는 했

지만 민주노총이 탈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위의 내용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Q. 이번 대선에서 개혁국민정당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5년 내내 개혁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 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남은 정당들을 청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보나 개혁 세력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정치개혁운동본부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개혁당, 여러 시민 단체들이 함께해서 국민들이 기존 보수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행정 권력, 청와대와 정부를 인수했습니다. 노 당선자는 아마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 정도, 이 정도의 대단히 불완전한 개혁을 할 것인데, 국민들이 이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 변화는 2004년 총선에서 70퍼센트 이상의 보수 정치인들이 물갈이가 돼야 가능합니다.

Q. 인수위에 김영대 사무국장을 비롯해 몇 분 참여하셨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개혁국민정당은 노무현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입니까?

A. 일단 저희가 정책연합을 통해 노 후보를 지지했고 노 후보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무현 정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당을 통한 정치개혁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들은 2004년까지 노 정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는 게 공식 결의입니다. 지난 번 인수위원회에 김영대 사무총장이 발탁됐는데, 우선 노 당선자의 의중이 대단히 강했고 그 다음에 노동쪽이 아무래도 올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노동쪽을 대변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수위가 끝나는대로 김영대 사무총장이 복귀하는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인수위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로 가고 내각에 갈 것이라는 등, 우리 당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꼭 제안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당을 정리하고 가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2기 때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겠죠.

Q.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이것을 탈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중심되는 가치와 기반을 갖되 좀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계급·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더 대중적인 정당을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개혁 세력들이 하나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대중적인 지지도 받았는데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을 열 석, 이십 석 얻는 정당으로 규정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브라질 룰라처럼 바로 집권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계급 정당으로 토대를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 계급 문화는 있는가?

오페라와 시는 종종 지배 계급의 취미로 치부됐다. 그러나 문화와 계급의 관계는 복잡하다. 또, 이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술의 문제는 종종 혁명 정치에서 중심이 돼 왔다. 린지 저먼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오늘 날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살펴본다.

린지 저먼
《여성 해방의 정치학》(여성사)의 저자

[편집자주] 지금도 일부 좌파들은 머리 염색 등을 “[미국]제국주의의 문화”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탈린주의의 민족문화론·민중문화론의 진짜인 이런 태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문화에 관한 토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그러나 문화를 둘러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답변들이 이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답변은 문화를 정치적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 어떤 영화나 책이 여성을 폭력의 희생자로 묘사하면 그것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진보적인’ — 유색인종 차별이나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예술이 계급 사회의 병폐들과 계급 사회 내의 관계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중간 계급’ 예술(때때로 모든 예술)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이런 예술이 노동 계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주장들이 이런 생각과 연관돼 있다. 하나는 모든 ‘고급 예술’ — 특히 비싼 관람료를 내는 극장 예술, 오페라, 갤러리 들 — 을 계급 의식적인 노동자들이 거부해야 하는 배타적이고 중간계급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TV 드라마, 록 음악, 축구와 경주 같은 ‘노동 계급 문화’를 ‘고급 문화’와 대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의 문제점은 이런 주장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주장들은 “나는 베토벤을 좋아하지 않아” 같은 주관주의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고 있어”와 같은 일종의 속물주의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와 그 속의 개인들 모두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 이 때문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문화 문제에 결코 무관심한 적이 없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 — 특히 마르크스·엔겔스·트로츠키·그람

시 — 는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문제를 다룬 글을 썼다. 그들은 특정 종류의 예술을 감상하는 데서 시작했다. 마르크스 자신은 문화를 사회 발전의 지표이자 인간 업적의 정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문화 이론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트로츠키였다. 그는 언제나 예술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를 “사회 전체나 적어도 지배 계급을 특징짓는 지식과 능력의 유기적 총합”이라고 묘사했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와 연관돼 있는 동시에, 그 사회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예술은 특정 사회의 산물이며 그 사회와 동떨어져서 평가될 수 없다.

“쾰른 대성당의 건축 설계도는 토대와 아치의 높이를 측정하고 본당 중회석 세 개의 치수와 기둥의 치수와 위치 등을 결정하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세의 도시가 어떠한지, 길드나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지 모르면 쾰른 대성당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예술이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서사시나 그리스 비극은 여전히 예술적인 흥미 거리가 되겠지만, 세계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인쇄기와 전신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더는 우세한 예술 형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인의 상상과 그리스 예술을 만들어 낸 자연관·사회관이 자동 기계, 철도, 기관차, 전신의 시대에 가능할까? ... 모든 신화는 상상 속에서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힘을 지배하게 되자마자 신화는 사라져 버린다. 여신 Fame이 프린팅 하우스 스퀘어(Printing House Square)와 어떻게 나란히 존재하였는가 ...

“... 아킬레스가 화약이나 총탄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일리아드가 인쇄기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노래 부르기, 암송하기, 뮤즈들이 인쇄기가 등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서사시의 필요 조건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자본가 계급이 생산하는 예술과 문화는 이러한 사회 발전의 반영이고 마르크스 시대에는 그 전 어느 때보다 훨씬 빼어난 예술 작품들이 생산됐다. 부르주아지, 즉 새로운 자본가 계급은 옛 중세 사회의 태 내에서 발전했다. 이들은 실제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몇 세기에 걸쳐 어마어마한 힘과 부를 발전시켰다. 도시, 대학, 인쇄술의 발전은 모두 성장하는 부르주아 문화의 증거였다.

부르주아의 문화적 산물은 방대했다. 르네상스 회화와 건축, 셰익스피어의 희곡, 밀턴의 시, 공연 음악의 발전. 그럼에도 부르주아 문화가 그 성과를 구축하고 세련되게 하며 발전시키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다.

부르주아 문화의 정점은 계몽주의의 등장부터 위대

드라크로와의 <바리케이드 위의 자유의 여신상>. 이 그림은 1830년 부르주아 혁명을 기념한 것이다.

한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유럽 전역에서 구질서에 대항한 1848년 혁명까지 약 1백년 간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부르주아 발전의 정점을 반영한다. 계몽주의라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으로 무장했으며 이미 영국·프랑스·미국에서 구질서를 전복한 자신감 넘치는 혁명적 계급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 산물 중에는 특히 부르주아 혁명가인 베토벤의 교향악, 스코트·발자크·디킨스와 점차 등장한 러시아 작가들의 위대한 소설들, 성장하는 도시들의 고전 건축들이 포함됐다. 그 문화는 자신감 넘치는 세계관을 표현했다.

1848년은 전환점이었다. 물론 그 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부르주아 예술은 나왔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더는 혁명적 계급이 아니게 된 때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 때부터였다. 그들은 옛 봉건 질서를 싫어했으나 노동 계급의 혁명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소심해져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착

하고 봉건 질서와 타협하면서 완전히 성숙한 부르주아 혁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일단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더는 혁명적이지 않게 되자, 그들의 세계관도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최상의 예술 가운데 일부는 점점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를 경축하는 게 아니라 그에 반대하면서 나왔다.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운동은 이러한 일관성 부족을 반영하는 기법들을 발전시켰으로써 이 조각난 세계를 이해하려 했다. 이 운동 속에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가 이런 기술 발전을 찬양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예술가들은 체제 전체에 도전하려 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1917년 혁명의 영향으로 많은 모더니스트들이 선포한 사회주의 예술이라는 사상에 몰두하게 됐다. 그들은 예술을 갤러리와 극장에서 떼어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법들을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전에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계급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부르주아 예술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것을 뜻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러시아 미술가들과 작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프롤레트쿨트’ 운동은 과거의 예술은 노동 계급에게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1918년 프롤레트쿨트 첫 대회에서 한 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의식이라는 짐을 진 채 새로운 삶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르주아 문화의 성취라는 또 다른 과중한 짐을 지우고 싶어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과중한 짐을 진 낙타처럼 조금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르주아 문화라는 낡은 쓰레기는 쪼다 내던져 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거부는 당시에 혁명적 파괴의 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든 진정한 노동 계급 예술을 발전시키고 훨씬 더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프롤레트쿨트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트로츠키는 더 심도 있게 비판했다. 트로츠키는 새로운 노동자 국가가 발전해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가가 과거의 성과 위에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기술 발전과 과학 연구를 혁명에 이롭게 이용하는 데 적용됐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점을 부르주아 예술과 문학에도 확장시켜 그것이 인간 존재와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성과를 거부하는 것은 인류 문화 전체와 사회주의 혁명 전에 예술가들이 성취한 모든 것을 거부함을 뜻했다. 게다가 트로츠키는 심지어 노동자 국가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논점은 이렇다. 첫째, 그는 노동 계급 전체의 문화 수준이 아직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 계급은 현존하는 부르주아 문화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특히 러시아에서 진실이었는데, 많은 러시아 노동자들은 거의 문맹이었고 노동자 문화 조직들의 수준은 독일보다 매우 낮았다. 그러나 심지어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 계급은 지배 계급이나 중간 계급이 누리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었다.

둘째, 노동 계급은 — 트로츠키는 혁명 성공 몇 년 뒤에 이 글을 썼다 —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가 없다. 이것은 혁명 전후 모두에 진실이다. 혁명 전에는 착취 체제가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여가 시간에는 완전히 지쳐 있게 만들고, 혁명 뒤에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확산하는 데 노동자 국가의 물질·인적 자원을 대부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혁명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혁명은 계급 투쟁, 폭력, 파괴, 절멸이라는 옛 사회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자신의 모순 때문에 망가졌을 것이다. 혁명은 사회와 문화를 구했지만 가장 무자비한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트로츠키의 셋째 반대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다. 초기의 자본가 계급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문화·제도·부·권력을 발전시켰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부·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프롤레타리아는 물질적 생산 수단과 함께 정신적 생산 수단도 박탈당해 있다.

노동 계급은 사회의 부를 생산하지만 자신의 노동 생산물과 분리돼 있다. 이러한 사태를 끝장내고 사회의 부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체에 맞서

투쟁하고 사회의 구 소유자들에게서 통제력을 빼앗아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 과정에서 노동 계급은 자신도 변화시킨다.

따라서 노동 계급이 혁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노동 계급이 정신적·물질적 생산 수단을 여전히 빼앗긴 상태일 것이므로). 또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 계급 문화라는 고립된 섬을 창출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이라는 과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자원이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는 혁명 직후에 진정한 의제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혁명이라는 즉각적 과제가 완수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가? 트로츠키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국가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돼 [국가가] 점차 소멸하는 과정에서만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의 문화적 산물은 어느 한 계급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가 집단적으로 노력한 성과일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일 것이다.

초기에 프롤레트쿨트 운동은 혁명이 직면한 어려움들과 후진국에서 일어난 혁명이 제기한 엄청난 역사적 문제들을 전혀 진지하게 평가하지 않는 과도 좌익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초기 열정은 언제나 계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도 좌익주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고통받은 문제 — 노동자들에게서 고립 되는 것 — 와 결합해, 프롤레트쿨트는 직접 혁명에 복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술을 모두 거부하는 데로 나아갔다.

1920년대 후반에 프롤레트쿨트나 이들과 연관된 사상들은 확일성을 강요하는 데 이용됐고, RAPP(프롤레타리아작가연합)는 트로츠키주의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나중에 판료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못 되자 RAPP 자신이 공격받게 됐지만 말이다. 1930년대 초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시대의 명령이 됐다. 그것은 부르주아 고전 예술의 패러디 형식을 빌어 스탈린과 소련 판료를 찬양하는 일종의 궁정 예술이었다.

트로츠키는 1930년에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자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위한 투쟁 — 단 5년 만에 모든 인류의 성과를 ‘완전 집산화’하라는 명령과 비슷

한 — 은 10월 혁명의 시작 때부터 공상적 이상주의의 성격을 지녔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레닌과 이 계통의 작가들이 이를 거부했다. 최근에 이것은 단순히 예술에 대한 관료적 명령 체계이자 예술을 메마르게 하는 도구가 돼 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트로츠키 시대 못지 않게 많은 논쟁이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고급 문화’만을 감상할 수 있거나 꼭 오페라를 보러 가야 한다거나 혁명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뜻일까? 노동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예술의 정점 뒤에 발전해 온 모든 종류의 매체를 거부해야 할까?

명백히 이런 견해들은 모두 어리석은 것이다. ‘최고의 부르주아 문화’ 시기 뒤에 나온 예술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그 뒤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 중 일부가 체제에 반대하면서 존재해 왔다. 예컨대 브레히트의 희곡,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카소의 회화 작품들처럼 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예술을 생산하는 데 참여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이 노동자라면 이들은 매우 자주 노동계급의 생활 방식이나 집단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발전시키는 것 — 창조적인 글쓰기, 회화, 다양한 형식의 음악 등 — 은 종종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의 행동이 ‘노동 계급 문화’를 이루지도 않고 이를 수도 없다.

트로츠키의 말처럼 “심지어 노동 계급의 가장 소중한 성과조차 프롤레타리아 문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은 가장 유력해질 수 있는 세계관을 발전시키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오직 혁명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나 혁신적인 예술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 — 계급 사회가 거부하거나 억눌러 온 이해와 감정들 — 를 표현한다. 그것은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에게 사실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에 매우 많은 예술가들이 적어도 체제에 불만을 품게 되거나 때로는 훨씬 더 급진적이게 된다.

예술이 인간의 열망을 표현하는 동시에 점점 더 상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급진주의가 표현될 수 있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주의는 오직 자본주의 사회라는 한계 안에서만 전개될 수 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예술가들은 반드시 그것을 자기 예술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예술가들은 선전 위주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등장 인물들은 자신이 확신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뛰어넘는 깊이와 힘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 — 밀리턴트 그룹의 정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 이나 마이크 리(Mike Leigh)의 <커다란 희망(High Hopes)>[1982년 새치 시대 런던을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 — 옮긴이] 같은 영화는 모두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좌파 사상을 전달하는 방식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선전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특히 가장 성공적인 소설들 가운데 일부는 아주 반동적인 관점을 지닌 등장 인물을 개발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순을 표현하고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예컨대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의 첫번째 소설 <초원은 노래한다(The Grass is Singing)>에서 주요 등장 인물은 로디지아(현 짐바브웨)에 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인으로, 그는 흑인 하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1930년대의 헌신적인 트로츠키주의자 소설가인 제임스 패럴(James T Farrell)은 자신의 소설 <스터즈 로니건(Studs Lorigan)>에서 주요 등장 인물을 좌파 정치와 집단 행동을 거부하는 여성 차별론자이자 유색인종 차별론자로 설정한다.

축구는 '고급' 문화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가?

오늘날 예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기 쉽다. 보조금 삭감, 기업 후원의 증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보수주의, 모든 측면에서 예술의 상업화.

그 결과는 대부분 평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 분야에 널리 퍼진 관습에 진정으로 도전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 주는 예술적 성과들도 소수 있다. 심지어 책이 잘 팔리는 소설가 — 예를 들어 줄리언 반스(Julian Barnes)나 마틴 에이미스(Martin Amis) 같은 사람들 —조차 때때로 반체제적인 기미를 보이기도 한다. 반제국주의 소설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살만 루시디는 훨씬 더 강력한 사례다.

혁명 조직과 사회주의 정치는 문화라는 문제에 대해 작지만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누가 문화를 소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수백만 명이 'Neighbors'를 보니까 거기에 뭔가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태도)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안에는 문화적 조류에 포함되지만 사회에 대한 통찰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소외의 산물인 여러 종류의 활동들이 있다. 이런 범주에는 예컨대 빙고·도박·스포츠가 들어간다.

그리고 재즈든 오페라든 서로 다른 예술 형식들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반동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술은 형식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요소들, 특히 그것이 우리 사회와 그 속의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심화시켜 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오늘날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형태의 예술을 좋아하거나 이해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들은 현대 예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론적 관점을 뛰어넘는 것을 뜻한다. 예술이 우리에게 정치를 직접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예술이 그것을 잘 한다면 매우 흥미롭다. 최근[1991년 — 옮긴이 주]의 희곡 두 개, 미셸 셀레스테(Michele Celeste)의 <대통령 목매달기(Hanging the President)>와 더못 볼저(Dermot Bolger)의 <아서 클리어리를 위한 비가(悲歌)(A Lament for Arthur Cleary)>는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가난한 백인의 심리나 아일랜드의 이민과 가난 문제를 정치 캠페넛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러한 발전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성해야 하며 정치와 예술 사이에서 협소하고 기계적인 연관을 찾으려는 경향을 피해야 한다. 

영어 공용어화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기웅
경북대 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물론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영어 구사 능력은 입학, 졸업, 유학, 취업, 승진,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까지도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영어 공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들 중 대다수의 경우에는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한 데는 잘못된 교육이나 학습 방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어라는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통상 어느 정도 적절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000시간 정도의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

오한데,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

른 외국어에 대해서

도 우리 사회의 현재

여건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상

황 속에서, 소설가 박거일

이 내놓은 과격한 주장, 즉

영어를 한국어와 더불어 공

용어로 채택하고 장차 가능

한 상황이 되면 모국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언어 민족주의 진영으로

부터의 격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심정적 동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8년 7월 영어 공용어화에 대

한 1차 논쟁 당시 조선일보가 실시한 인터넷 찬반

투표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45%였으며, 1999년 11

월 교육방송(EBS)에서의 토론 후 시청자 여론 조사

에서는 62%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영어를 장차 모국어로 체

택할 수도 있다는 박거일의 주장이 과격하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영어를 공용어화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 하는 것이 거의 강제적인 필수 사항이며, 더구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유용한 언어인 이상,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소박한 생각을 단순히 민족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18-19세기의 서구 민

족주의 사상가들이 내세우

던 핵심 명제 중의 하나인

“언어는 민족혼이다”라

는 주장은 이미 현실적

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사회의 동

질성의 근간을 이루

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동일한 민족

어의 공유라는 막

연한 일반적인

생각 또한 실제

사실과는 거리

가 있다. 사회

의 경계와 언

어 공동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으며, 또한 동일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계층적, 정

치적, 지역적, 성적... 차별화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라는

민족어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어떤 필연적

연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한국어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는 모국어이며 또

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의

사소통 및 표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가 “우리 민족의 일”이며 내재적 가치라는 형이상학적 믿음에 근거해서 영어 공용어화론을 반박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서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태도 표명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한 비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어 공용어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보편적 의사소통 및 표상 수단으로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처한 사회의 실제 현실인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그것이 표명하는 일견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반응임에는 틀림없다. 이 점을 우리는 크게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언어학적으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 상이한 두 언어 사이의 언어적 간섭은 사회적으로 강한 언어가 약한 언어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그와 동시에 밀려나는 약한 언어는 그것이 기층 언어일 경우에는 강한 언어의 음성-음운-억양 구조나 문법 및 어휘 구조에 광범위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일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경우 그리고 영어가 점차로 사회적으로 강한 언어의 지위를 점유하게 될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 한국어는 점차로 밀려나게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영어 또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국식 영어가 될 것이다 (아마도 행정, 금융, 상업 등의 영역의 하급 기관에서는 피진 잉글리쉬 (Pidgin English)와 같은 유형의 흥미로운 새로운 혼합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식 영어는 여전히 국제무대나 상급 기관에서는 차별을 받을 테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누가 미국식 혹은 영국식 영어를 잘 하느냐에 따른 차별화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언어학적 차원에서, 언어와 사고의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두뇌 구조 속에서 언어와 사고는 발생론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다. 즉, 우리의 뇌에서 사고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과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사고의 발달 과정과 언어의 발달 과정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생후 2년이 좀 지나면서 이 두 과정은 서로 만나게 되고, 비로소 언어적 사고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가 되면 어린 아이는 두 단어짜리 문장들을 구사하게 되며, 만 3살이 되면 1000 단어 정도의 어휘와 성인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적 문형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상 어린 아이의 언어 습득과 사고의 형성에 있

어서 만 3살까지의 시기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까지의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의 특징은 사고의 발달이 언어의 발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언어의 발달이 사고의 발달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지각적 이미지들이나 생각들의 연결 방법보다는 단어들의 연결 방법을 먼저 숙달하며, 따라서 그의 언어적 사고의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먼저 습득한 언어적 틀과 자신이 겪는 사회-문화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심리-언어학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 더불어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이중언어 사회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을 상상해보자. 이 경우, 어떤 아이들은 두 개의 언어를 제대로 다 구사하면서 정상적인 사고의 발달 과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언어 모두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사고의 발달에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어린 아이에게 명확히 다르게 인지되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두 언어의 습득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적절한 전환”(code-switching) 능력의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사고의 발달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언어적 장애와 사고 발달의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는 두 언어를 모두 제대로 습득하는 경우도 많지만, 두 개의 언어의 혼동으로 인해서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개인적 언어”(idioglossia)를 구사하거나 언어적 장애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영어 공용어화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나 태어난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모한 실험을 펼치려 하는지 그 사회적 무책임성에 실로 아연할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영어 공용어화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토론이 찬성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 모두 그 이론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고 허구적인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물론 필자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편에 선 셈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막연히 민족주의적인 대중적 정서나 맹목적인 언어 민족주의의 관점에 입각해서 현실의 문제를 재단하는 것이 대중 각자가 실제로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논쟁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이 양편 모두 실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용어화론의 실천적 귀결에 대중 각자가 찬반으로 나뉘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언어적 영향력의 증압감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 각자에게 억압적으로 강제되는 현실적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개인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전가될 경우에 대중들은 문제 해결을 자처하는 잘못된 주장이나 위험한 주장에도 급진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데, 영어 공용어화의 문제 또한 이러한 잘못된 상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우리는 영어를 공용어화하지 않고도 좋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영어 구사 능력을 지금처럼 개인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평가 척도로 규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관습과 억압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자본주의 체제가 제도화된 교육에 덧씌우고 있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들 간의 선택과 차별화 및 불평등의 지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시너 역 할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란 근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 외국어의 구사 능력이 이러한 본질적 기능과는 별개로 개인들 간의 경쟁을 억압적으로 부추기는 제도적 폭력으로 확산·심화되는 사회 체제가 과연 유지되고 존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로 의심스럽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김어진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제3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린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 운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이 될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전 세계 운동의 거대한 결집이었다. 제1회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 세계경제제포럼을 반대하고자 처음 개최됐다. 1971년부터 세계경제제포럼은 자본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기구였다. 이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1천 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한테서 후원을 받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세상을 상품으로 여기는 그들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포어를 내세웠다.

2001년 세계사회포럼(1회)에는 1백17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대규모 회의와 4백20개의 워크숍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월든 벨로가 이끄는 그룹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일방으로 승리했다. 월든 벨로는 다보스의 세계경제제포럼에 참석한 경제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라고 통쾌하게 말했다.

지난해 제2회 세계사회포럼은 세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무려 7만여 명이 참가했다.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 남아공 소웨토에서 온 지역 활동가 등 1백23개국에서 무려 4천9백9개 단체들이 참가했다. 네 가지 주제(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 시민 사회와 공공 영역의 확산, 새로

운 사회의 정치 권력과 윤리) 아래 27개의 대회, 96개의 세미나, 6백22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런 놀라운 성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 남반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올해 제3회 세계사회포럼은 어떨까? 세계사회포럼의 조직자들은 이번 세계사회포럼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클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놀라지 마시라. 올해에는 2만 5천여 개 단체가 참가 등록을 했다. 대회가 임박할 때쯤이면 등록 단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참가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자격이 있는 워크숍은 ‘세계사회포럼 원칙 헌장’에 따르면 “포럼의 공장”, “세계 시민 사회의 실험실”로 불린다. 올해에는 이 실험실이 자그마치 1천8백여 개가 넘게 신청돼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세미나들이 등록돼 있다. 브라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참가 단체들은 반전 워크숍을 가장 많이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의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둘째, 원칙·가치·인권·다양성·평등. 셋째, 매체·문화·반해게모니. 넷째, 정치권력·시민사회·민주주의. 다섯째, 민주적 세계 질서와 반군국주의 투쟁 그리고 평화 촉진이다.

다섯번째 테마는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 주제 아래 열리는 대규모 회의와 패널 토론·워크숍·세미나 등은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 낼 장이 될 것이다.

제1·2회 세계사회포럼은 다양성이 특징이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도 환경·여성·노동조합·인



2003년 세계사회포럼

세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운동의 거대한 집결

2003. 1. 23~28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www.foursocialmundial.org.br

권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참가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포럼에는 대안을 놓고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패널 논쟁에서는 주요 쟁점과 전략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서 “다른 세계”의 전망이 제출될 것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는 많은 패널이 참가한다. 국제 반전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주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수전 조지, 무토지 농민운동 지도자, 종속 이론가 사미르 아민, 남미의 대표적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설명이 필요 없는 노엄 촘스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유럽사회포럼에 참가한 이탈리아 CGIL의 지도자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미국 녹색당 지지자인 영화 배우 수전 서랜든도 연사로 참가한다.

논쟁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생각과 전망들이 논쟁되는 것은 세계 반자본주의의 운동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종속이론적 대안, 정당 참여 배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세계사회포럼이나 유럽사회포럼은 정당을 정식으로 배제한다. 세계사회포럼의 ‘원칙’ (5)에 따르면 “오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운동들만을 모으고 서로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며 정당이나 군대 조직의 대표들은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배어 있다. “공식 좌파”(사회당·공산당·녹색당) 집권 기간의 끔찍한 기록, 자율주의의 영향력 등이 정당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사회포럼의 ‘원칙’ (6)에 따르면 “정부 지도자들이나 의회 의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포럼에 초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것은 모순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운동 내 다양한 경향들은 나름의 정치적 경향을 표방하며

2002년 세계사회포럼

활동한다. 세계사회포럼도 정당의 참여를 금지시켰지만 마지막 회의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축제와도 같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 참여 배제라는 태도와 모순된다. 실제로 정당에 관한 관심은 높다. 2002년에 열린 유럽사회포럼(ESF)에서 ‘정당’을 주제로 한 토론에 자그마치 6천여 명의 청중이 몰려든 것도 주목할 만한 예다. 다른 견해를 놓고 우호적으로 토론을 벌여야 하는 한편 그 논쟁을 행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느냐 여부는 반자본주의운동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는 한국인 참가자들은 어느 때보다 많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거리로 나온 한국 대중, 촛불 시위와 한국의 사회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국 워크숍을 준비중이다. 이 워크숍에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최근 반미 운동이 국제 반전 운동의 일부라는 점을 세계사회포럼에 온 국제 활동가들과 공유할 것이다. 한국 민중이 부시가 북한에 가하는 압박에 박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참할 것이다. 또, 한국인 참가단은 주한 미군이 저지른 환경 오염, WTO와 아시아의 글리벡, 새만금에 관한 영상, 한국의 민중 투쟁에 관한 영상 등을 준비중이다. 다함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스튜디오 아이스크림,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들이 민중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활동의 모범으로 여겨질 만하다.

1월 9일 한국 참가자 사전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을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한테 세계사회포럼을 열심히 알리고 보고하자고 결의했다. ‘연대와 전진’이라는 이름의 제2회 한국사회포럼에서 2월 7일 첫 날 세계사회포럼을 보고할 예정이다. 

자본주의 인터내셔널

제임스 굿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세계경제포럼(WEF)이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연례 대표 회담을 연다. 1998년 대표 회담에 참석한 알렉산더 도우너는 대표 회담을 국제 '기업 올림픽'으로 묘사했다. 보통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본부에서 열리던 연례 회담은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상처 입은 뉴욕 시에 연대하는 뜻에서 뉴욕에서 열리기로 재조정됐다.

세계경제포럼은 한편으로는 세계 기업 총수들의 거대한 각테일 축제다. 정책을 결정할 조직적 힘은 실제로 없지만, 세계경제포럼은 국제 "지도자"들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설명할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전 세계적 의제를 정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그들의 의제라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유럽 기업들의 연례 '유럽 경영자 포럼'으로 탄생했다. 1987년까지 유럽공동체(EC)의 재정 지원을 받다가 세계경제포럼으로 바뀌 뒤 국제적 진출을 시작했다. 이 포럼의 회원 자격을 보면 계급 지향을 알 수 있다. 가장 유명한 1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경제포럼 '창립 회원'을 구성한다. 거기에, '세계 성장 기업' 모임, 3백 명의 '산업 장관' 모임, '3백 명의 세계 미래 지도자' 모임, 정·재계의 '세계 경제 지도자' 모임, 1백 명의 미디어 그룹들의 '세계 미디어 지도자' 모임, 1백 명의 '세계

문화 지도자' 모임, 대학과 각국 경제 연구 기관의 우두머리로 구성된 '포럼 특별 회원' 모임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국제적 의제를 결정하는 포럼이 되고 싶어 안달한다. 그들 자신의 신중한 의견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는 일에 헌신하는 기업인, 정치인, 지식인 지도자들과 그 밖의 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상의 국제적 동반관계"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기업 세계화의 결정적 발전으로 세계경제포럼은 국제 엘리트들의 결집장으로, 계급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례 없는 구실을 해 왔다. 분명 세계경제포럼은 국제적 의제를 확립할 수도, 확실히 그 결과를 좌우할 수도 없다. 즉, 세계경제포럼은 사회를 통제하는 비밀결사대는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그보다는 자기 의식적으로 집단적 계급 이익을 계획하는 구실을 수행하는, 사회 관계 속에 아로새겨진 계급 조직이다. 그들은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주고 쇄도하는 도전에 대응하려고 애쓴다. 이런 측면에서, 키스 반 데르 피즐(Kees van der Pijl)이 주장하듯이, 세계경제포럼은 최초의 '진정한 자본의 인터내셔널'이다.

이 포럼은 놀랄만치 성공했다. 1971년 이래로 '국제 상황'은 많은 참가 기업들에게 극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1980년대에 세계경제포럼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이었고, 다국적 기업 이사들과 함께 이 의제를 펼칠 계획을 세밀히 세우기 위해 OECD 나라들뿐 아니라 새롭게 산업화한 세계로 '간

2002년 뉴욕세계경제포럼

주된' 나라들의 정치인들을 끌어 모았다. 세계경제포럼은 공격 감시에서 벗어난 사전 포럼이 됐고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중심 구실을 했다. 이 모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겪은 축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됐고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대가는 체제 내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었다. 세계화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경계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물론 자본주의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했다.) 순환이 빨라지면서 시간적 경계는 사라져 버렸다. 다국적 기업의 영역이 성장하면서 공간적 경계는 대체됐다. 심지어 사회심리학적 경계도 생활이 더욱 상품화하면서 소멸했다. 새롭게 힘을 얻은 다국적 자본가들은 축적을 할 새 영역을 장악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계급 헤게모니는 결코 보충되지 못했다. 새로 개척한 영역에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다. 빨라지고 있는 순환이 경제 주기를 가속하고, 자신감도 금방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 상징들이 소위 '펀더멘털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보여 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 옮긴이]'로 나타나고, 광란의 투기가 지배한다. 기업 다국적주의는 사회적 · 물리적 환경을 고갈시켰다. 상품화 증대는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고 문화적 생존을 강요하는데, 이것은 흔히 새로운 사회 교류 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적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신자유주의 처방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현재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보라.) 경영진의 봉급과 기업의 자본 축적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 힘이 극적으로 집중되는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계급 전략이 명백히 성공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적 불평등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융 불안정, 환경 파괴와 사회적 혼란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의 승리는 새로운 반대의 근원을 만들었고 그 충격과 대응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수세에 몰렸다. 그 높은 파고는 1995년에 있었는데 그 때는 OECD가 "2020년 세계 전망, 새로운 황금 시대"를 선언한 해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때때로 '제3의 길'로 묘사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유주의에서도 나타난 정치적 재생이 OECD를 휩쓸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의 신자유주의 계획은 긴급하게 수정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자신의 시장 근본주의를 숨기고 현재는 기업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만들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을 거부하지 않고 포용한다. 신용평가 기관과 경영자문기관, 국제관계 연구소, 비정부 기구(NGO)의 분석가, 컨설턴트와 조언가들이 새로운 자본 축적의 패러다임을 규정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논쟁에 참여했다. '시장 규율'을 강화하

고, 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고, 다국적 계급 권력을 제도화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 집단 사이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최고의 엘리트 기관들조차 신자유주의를 재고하고 있다. 한스-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은 [《세계화의 덫》에서 — 옮긴이]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운영자들 다수가 '시장의 독재'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로스 재단'과 '터너 재단'이라는 창의적인 이름이 붙은 기구들을 통해 온정주의적 개입을 일삼던 조지 소로스와 테드 터너 같은 신자유주의의 주된 옹호자 · 수혜자들도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에 진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키스 반 테르 피즐이 강조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점차 '어제의 처방'을 재고해왔고 분명히 이를 반대해 왔다. 그 결과는 훨씬 더 광범하며 잠재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 대중의 공공 영역 재장악, 궁극적으로는 계급 사회의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만든다.

최근의 발전은 이런 이견을 가진 부분의 힘을 강화시켜 왔다. 1998년에 OECD가 '다자간 투자 협정'을 연기하고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 라운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구조조정'이라는 IMF의 세계 체제가 점점 위기에 빠져들면서 정당성의 제도적 위기가 누적됐다. 여기에 '이행기의' 옛 공산권 국가들, 특히 러시아의 계속된 위기와 1997~1998년 금융 위기가 동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들에 '전염병'처럼 번진 심각한 충격, 임박한 정보 · 오락 산업의 거품 폭발이 더해지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은 억누를 수 없는 듯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여 준 것이 1996년 제네바, 1998년 쾰른, 1999년 시애틀, 2000년 워싱턴, 2001년 몬트리올과 제노바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중의 극적인 폭발이었다.

몇 년 만에 최초로 '반자본주의' 저항이 자본주의의 심장부와 전 세계 무대로 돌아왔다. 이런 저항은 변혁을 통한 현재 사회의 불치병 극복이라는 가능성을 의제에 올려 놓으면서, 대안적인 지도적 원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열어 놓았다. 자본주의 규율을 장려하는 게 의문시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구들을 겨냥하고 저항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서 세계경제포럼 회담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1996년 이래로 세계경제포럼은 점점 더 전투적인 반발을 자극했고, 그에 대해 신자유주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대응은 밀실 전략 회의를 일삼는 듯한 인상을 피하고 더 공개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 세력의 유명한 대변자들과 관련을 맺는 것처럼 보여서 그 정당성을 재확립하려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자신을 신자유주의 재평가 논쟁의 중심에 두려 한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배제된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OECD 소속이 아닌 정부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같은 중요한 NGO에 손을 뻗쳐 왔다. 1998년 다보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NGO와 그 밖의 '시민 사회' 대표들의 구실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FL-CIO[미국의 통합 노총 — 유니언] 위원장 온 존 스워니는 시장이 '단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배 문제를 부각시켰다. 1999년 당시 미국 부통령 앨 고어는 코피 아난과 함께 TV에 출연했다. 코피 아난은 '인권, 노동 환경, 환경적 실천 영역의 핵심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기업과 UN이 '세계적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2000년 클린턴은 토니 블레어와 함께 새 천년의 장미빛 전망 — 1999년 시애틀 시위로 다소 흐려지긴 했지만 — 을 공유했다. 다보스 정책토론은 2000년에 했던 '책임있는 세계화', '포괄적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주제와 함께, 오늘날에는 '제도적 포용', '기업의 책임감'과 '국제적 대화'라는 말들로 표현된다. 아마 가장 냉소적으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채점표' — '국내 환경이 기업의 국내·국제 경쟁력에 얼마나 이바지하거나 방해물이 되는지'에 대한 연간평가표 — 가 2000년 다보스에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 지수'로 대체됐다. 동시에, 제인 켈시가 강조했듯이, 1만여 개의 핵심 경제 결정단체들 사이에 새로운 인터넷 연결망인 '세계 경제 공동체' — 기업들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인터넷 '핫라인' — 가 건설되고 있다.

논쟁은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될 만한 개정된 제도적 틀을

세우는 데에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의제를 형성하는 데서 중심 구실을 하려 한다. ICFTU[국제자유노련] 같은 일부 단체는 세계경제포럼의 걸보기에 번드르르한 의제를 마음에 두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옹호자가 되기 위해 이 과정에 참가했다. 그러나 핵심적 의문은 세계경제포럼이 이러한 의제를 추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기업 이익이 지배하는 포럼이 미래 세계 정부의 틀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도록 용인해도 될까? 이러한 의제 형성 과정을 용인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역할에 도전하고 대안적인 정의를 내세워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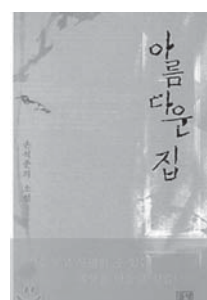
2000년 다보스에 모인 경영진들이 클린턴의 연설 전에 보안 점검을 하기 위해 회의실을 비우는 걸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보안팀은 기업의 '항의 농성'으로 말미암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클린턴의 연설은 진행됐다. 결국 미국 대통령조차도 기업 집단의 의지를 존중해야만 했다. 어쩌면 그는 회담장 밖에 있던 1천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하면서 기업 권력에 대항한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어야 타당했을 것이다.

이번 달 말 세계경제포럼 대표 뉴욕 회담장 주변에서 유사한 시위들이 열릴 것이다. 1999년에 이 대표자들은 무역 자유화가 불가피하고 '지적 재산권과 외국 투자를 보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국 정부가 다가올 WTO의 '밀레니엄 라운드'를 지지하도록 로비했다. 2002년 우리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미사여구를 듣게 될 것이다. 세계화한 신자유주의를 정치화할 아이러니한 순간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반대에 대한 정보는 <http://www.s11.org>에서 볼 수 있다.

2002년 2월 2만 명이 뉴욕에서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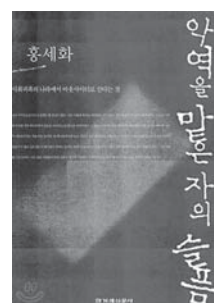
‘변혁인가 아만인가’ 연사들이 쓴 책을 이번 기회에 읽어 보십시오



알렉스 캘리니 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북막스

박노자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한겨레신문사

홍세화
썰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
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신문사



알렉스 캘리니 코스 외
노동자 계급에게 안녕을 말
할 때인가
책갈피

손석춘
아름다운 집
들녘

홍세화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창작과비평사



알렉스 캘리니 코스 외
민족문 제의 재등장
책갈피

손석춘
R통신
한겨레신문사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알렉스 캘리니 코스
역사의 복수
백의

손석춘
부자 신문 가난한 독자
한겨레 신문사

정성진 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
체제의 변화
한울



알렉스 캘리니 코스
이론과 서사
일신사

손석춘
신문 읽기의 혁명
개마고원

이희수 외
이슬람
청하출판사

알렉스 캘리니 코스 외
현대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
갈무리

손석춘
여론 읽기 혁명
한겨레신문사

장석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홍세화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한겨레신문사

강남훈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조제 보베 · 프랑수아 뒤푸르 (대담자질 뤼노) 울력

1999년 시애틀 시위의 대성공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와 함께 이 운동의 탄생과 성장에 기여한 주요 인물들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상징적 대변자로 등장했다.

조제 보베는 바로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1999년 동료 농부들과 함께 프랑스 미요시의 맥도날드 매장을 공격한 일로 유명해졌다. 그 뒤, 보베는 많은 반자본주의 투쟁에 참가해 왔다. 2000년 여름 미요시에서 맥도날드 매장 공격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을 때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시위와 토론 그리고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대중 행동에 참가했다.

이 책은 조제 보베와 ‘농민연맹’—프랑스의 급진적 소농 단체—의 동료 지도자인 프랑수아 뒤푸르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들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같은 정책들이 하는 구실, 또 특정한 농업 방식, 즉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농업 방식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유럽의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더 농업 생산의 토대 자체를 침식하고 환경을 더욱 파괴해 왔음을 폭로한다.

더 많은 생산을 최고 목표로 삼는 ‘생산주의’가 농업을 지배한 결과, 갈수록 더 많은 항생제가 가축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생태 균형을 무시한 단작 재배와 제조제·화학 살충제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토지는 생명력과 자정 능력을 상실

한 채 메말라 간다. 떨어진 토지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화학 비료가 사용돼야만 한다. 정화되지 않은 가축 분뇨, 농업 폐기물, 화학 비료, 화학 살충제, 제조제 등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광우병과 유전자 조작 식품에 내재된 위험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최종 피해자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다.

이 모든 대가를 치렀지만 대다수 농민들의 삶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화학 살충제와 제조제, 화학 비료, 종자

(씨앗)를 지배하는 소수의 거대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몬산토가 대표적이다)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즉 사람들의 반감과 위기 의식에도 자신들의 이윤 획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갖은 방식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회와 대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구실에 대한 주장들도 매우 설득력 있다.

보베와 뒤푸르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더 넓은 운동들에 대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치면서, 시애틀과 미요지에서 벌어진 투쟁의 중요성을 말한다. 보베는 시애틀 시위가 “새로운 저항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오랜 기간의 실패와 이전 세대의 침묵 이후에 정치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증언한다.

저자들은 몇 가지 독특한 생각도 드러낸다. 예컨대, 보베는 “마르크스주의적 계획의 대안”으로서 19세기 아나키스트인 “바쿠닌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 그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프랑스에서 등장한 ‘자주 관리’ 운동이나 스페인 내전 당시 ‘전국노동연맹’이 조직한 토지와 공장

의 ‘자주 관리’ 경험도 언급한다. 그러나 보베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닌 명백한 허점들, 즉 그것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자주 관리(또는 협동 조합)’ 운동의 현대판 시도들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심지어 국내 시장에서조차도) 갈수록 주변화하거나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이윤 논리에 굴복하곤 했다.

소규모 생산자들의 협동조합들은 기껏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작은 틈새 시장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사실 그보다는 대규모 생산자들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완전히 밀려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보베는 또 반자본주의 운동 안에서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오늘날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혁명적 이상은 없”으며, “그런 것은 이제 끝났고 그렇기에 희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당’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보베가 인터뷰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과 함께 사회의 근본 변혁에 대한 전망이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베와 뒤푸르의 인터뷰는 생생하고 열정적이다. 반자본주의 운동 내의 쟁점과 논쟁들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원하는 누구나 이 책을 읽어 봐야 한다.

김용민



츰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암 츰스키 시대의 창

이 책은 프랑스의 두 언론인 드니 로베르와 베로니카 자라쇼비치가 노암 츰스키와 인터뷰한 것을 펴낸 것이다. 1970년대 말 나찌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리옹 대학 교수 로베르 포리송이 해임됐을 때, 츰스키가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츰스키는 포리송 사건이 표현의 자유 문제임을 밝히는 짤막한 글을 썼는데, 어이없게도 그

글은 ‘가스실 학살’을 부정하는 포리송의 책 서문으로 이용됐다. 그 글에서 츰스키는 포리송의 주장을 혐오한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그 뒤 프랑스에서 츰스키의 책은 좀체 출판되지 않았다. 이것을 개탄한 두 언론인은 프랑스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츰스키

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소개할 책을 출판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이 책이 나왔다.

프랑스 사회에서 포리송 사건으로 가려진 츰스키의 진가를 드러내 보여 주겠다는 두 언론인의 바람은 이뤄졌다.

츰스키는 인터뷰에서 여러 주제를 넘나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미국 지배자들의 탐욕·기성 언론을 준엄하고 신랄하게 폭로했다. 츰스키는 다국적 기업·국가·국제 기구가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의존적인지 구

체적으로 논증한다.

“권력의 중심은 부자 나라들에 있습니다. …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 금융 기관과 국제 기관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 세계 무역기구 WTO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전쟁 무기화 다름없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목표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권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니까요.”

츰스키는 당시 (1999년) “인권 보호”를 내세워 발칸 반도에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위선에 철퇴를 내리쳤다. 그의 말대로 “오히려 폭력은 인종 청소를 가속화시켰”다. 그는 결국 문제는 “누가 발칸 반도를 지배할 것이냐?”였다고 핵심을 찌른다.

츰스키는 경제 전쟁과 군사적 전쟁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모든 생생하게 보여 준다. 또, 그런 전쟁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국민 전체에는 이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당시 클

린턴 정부 시절] “그래도 미국 경제가 성장과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된 때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클린턴 행정부 아래에서의 생활이 대부분 국민의 땀에서 나왔습니다. … 상위 0.5퍼센트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

다. 그런데 임금은 유럽에 비해 낮고, 노동시간은 모든 산업국가 중에서 가장 깁니다. 유급 휴가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고 지적한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공식 이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라고 응수했다. 지배 계급은 언제나 압전하게 있어야 할 대중이 정치 토론에 끼어들거나 행동에 나서는 것을 ‘과도한 민주주의’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절제된 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배자들은 “대중이 온순하고 무관심한 대중으로 돌아갈 때에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츰스키는 꼬집었다.

또, 그런 점에서 “‘제3의 길’은 이런 문제들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제3의 길’은 유권자를 속이고 유권자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휴머니즘이란 가면으로 치장한 정략일 뿐입니다.”

츰스키는 “대중이 저항하고 싸워서 때때로 승리를 거둘 때에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지만 운동과 민주주의의 세계화는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옹계 보았다.

물론, 1970년대 이전과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교할 때 자본주의의 본성 자체가 변한 듯 과장하는 약점도 있다. 그는 197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의 본성이 ‘생산적’인 반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95퍼센트 이상)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츰스키는 금융자본의 비정상적 성장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럼에도 단 두 시간 동안 한 인터뷰를 담은 이 책에서 우리는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츰스키의 통찰력과 거침없는 전투성을 흠뻑 느낄 수 있다.

조승희



R 통신

손석준, 한겨레신문사

새로운 R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 세대는 현실에 뛰어들어(rush) 저항하고(resistance) 마침내 혁명(revdlution)을 이루겠다는 세대다. 이것은 나이로 구별하는 세대가 아니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며 투쟁하려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R통신》은 손석준 씨가 'R세대'에게 인터넷으로 보낸 편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언론 운동을 해왔다. 저자는 보수 언론이 정권과 결탁해 민중을 어떻게 탄압해 왔는지 증언한다. 1980년 수구 언론들은 광주 항쟁에 참가한 민중을 폭도와 난동자로 몰아세웠다. 반면, 학살자들은 새 시대의 기수로 추켜세웠다.

1996년 보수 언론들은 사회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마녀사냥하는 데 크게 한 몫 거들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김정일-김일성 부자의 쇠파이프 특공대'라고 매도했다. 학생들에게 "철퇴를 내려라"는 섬뜩한 사설까지 실었다.

손석준 씨는 이 책에서 보수 언론들이 정권, 어용 지식인들과 어떻게 결탁하는지 생생하게 폭로한다. '부자신문'들은 군사 독재에 아부하던 교수들의 칼럼 한편에 수백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민주당은 출입 기자들에게 수십만 원씩 손지를 뿌렸다.

《R통신》에는 답장을 보낸 사람들의

사연들이 많이 소개돼 있다. 그 사연에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만, 아픔, 고민이 담겨 있다.

"고학을 해서라도 대도시 유학을 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저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자리잡힐만 하니 대졸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군요. ... 저는 팽 신세가 되었답니다." 한 고졸 노동자의 편지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새롭게 사회를 바꾸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중학생이 <중앙일보>에 분노해 쓴 편지도 있다.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속인 언론에 분노해서 언론 개혁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사연도 볼 수 있다. 친구와 같이 운동

에 나서길 바라면서 고민을 털어놓은 진지한 활동가의 글도 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을 자기 학생들에게 알려려 노력하는 교사의 고민도 읽을 수 있다.

"군사 독재 같은 뚜렷한 적이 없잖아요?" "운동은 '옛날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벗들에게 손석준 씨는 사회에 저항하라고 당당히 얘기한다. 그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반민주 세력이 아직 엄존하고 있으니 당당히 싸우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민중이 있으니 싸울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며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싸우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소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그렇지만 최근 촛불 시위에서 보듯 사람들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

다. R세대 대열이 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지금 쓸쓸해 할 이유가 더는 없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언론·정치·사회에 대해 자주 만나는 논점들이 있다. '언론은 중립적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는가?' 등 저자는 이런 질문들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한다. 저자의 답변은 가슴에 와 닿으면서 날카롭다.

이 책의 부제가 "젊은 벗에게 띄우는 손석준의 러브레터"다. 저자는 사회에 저항하다 마녀 사냥 당한 '마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R통신》은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것이다.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에 대한 신선한 고민거리와 답변을 던져줄 것이다.

승영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최장집 교수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초기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다가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에 희생돼 중도하차한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우익 언론이 퍼뜨리는 천편일률적인 냉전 수구 이데올로기에 여론이 이끌리는 모습은 매우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의 새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왜 그토록 보수적인지 '민주화' 이후에도 왜 사회는 나아지지 않았는지 해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보수정당 체제에서 정치는 노동자·서민들과 유리된 채 정치 엘리트들의 '일상사'가 돼 버렸다. 민주화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재벌의 힘은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서게 됐다. 교육은 계급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고,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하는 현상도 심각해졌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 없는 개혁주의'



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파산한 김대중식 개혁, “민주주의와 시장의 병행 발전”이라는 ‘제3의 길’ 식 주장에도 미련과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민주화가 보수적 정치 질서로 귀결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예로 들면, 민주주의 이행이 광범한 사회의 요구와 개혁 의제를 배제한 채, 정치 엘리트들 간의 협약으로 정치 경쟁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민주화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6·29 선언 뒤 정치 협상은 제도권 엘리트 간의 정치 게임이었지 운동 세력이 참여한 협상은 아니었다. 여야 8명이 참여한 정치 회담은 민주화 운동을 대변한 국민운동 본부를 배제하고 참여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구체제 엘리트들의 ‘원탁회의’였다.

저자는 “한국 사회 최대 균열이 여야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이슈와 괴리된 채 벌어지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불과하다.” 하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징표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선 투표율과 달리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상위 세 정당이 유권자에게 얻어낸 지지는 41.7퍼센트였다. 투표를 안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다. 즉, 한국 사회 최대 균열은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 체제’와 비투표자 사이의 균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국만의 특징은 아닌 듯 하다. 물론, 한국의 정치 구조가 좀더 폐쇄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들의 별 차이 없는 정책 대안과 민중의 정치적 소외는 단지 한국의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 1999년 시애틀 시위가 미국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반

성을 극적으로 폭로했듯이 현재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 미국이든 서유럽이든 —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중은 투표에 기권하는 것뿐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는 거리에서 자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자의 대안은 자유주의적이다. 이 점이 이 책을 매우 공허하게, 적어도 모호하게 만든다. 저자는 노동을 배제한 정치와 시민 사회를 비판한다. 저자는 노동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 통합’이 ‘민주주의’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한다.



권위주의적 독점 구조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경제 시장에서도 독점과 배제가 지배적 원리가 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본래의 특징이 발휘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말이다. 그가 바라는 ‘민주적 시장 경제’는 대체로 독점을 배제한 투명성과 공정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별로 새롭지 않은 이 주장은 시장 경제가 독점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또, ‘권위주의적 시장’을 ‘개혁’하려 하는 ‘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의 흐름들이 현실에서는 저자도 비

판하는 신자유주의로 수렴돼 왔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적 시장’과 ‘민주적 시장 경제’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없듯이 ‘민주적 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 사이에도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이 지난 50년 간의 정치사를 묘사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그토록 보수적인지 드러낸 부분은 매우 뛰어나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노동 계급의 힘”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저자가 “지금 우리는 권위주의와 점찍되었던 냉전반공주의, 기술 관료주의, 시장근본주의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는 여러 형태의 힘, 조류들과 대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민주화를 가져왔던 강력한 운동의 힘은 대체로 해체되거나 약화된 상태이다.” 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사실, 중도 좌파나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일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와 극좌파로 사회가 빠르게 양극화한 것은 중도 좌파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게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가 자 동시에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부르주아 대의민주주의의 파행은 언제나 위기지만, 좌파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진보 정당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자의 결론처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사상적 자원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보다는 계급 정당과 계급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분명해 보인다.

한규한

맨발의 겐

나카자와 케이지 아틀리 미디어

《맨발의 겐》은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이나 핵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세계평화를 걱정하는 양 북한의 핵개발을 자못 엄숙하게 꾸짖고 있는 미국은 반세기나 앞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바 있다.《맨발의 겐》은

당시 히로시마를 체험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다. 원자폭탄이 터질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카자와 케이지는 아비규환의 히로시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피폭후 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는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부추긴 전쟁과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인해 평범한 일본인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가를 겐이란 소년을 통해 그려낸다.

1945년 히로시마 상공에서 낙하산에 매달려 유유히 떨어진 원자폭탄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 원자탄이 폭발하며 내뿜은 수 천 도의 열선은 사람들의 피부를 벗 녹듯 녹아 내리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 내린 피부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팔을 쳐든 채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했다. 폭발 후 뒤따르는 강력한 폭풍으로 사람들이 통제로 날아가 나뭇가지 여기저기에 꽂히는가 하면, 유리파편이 온몸에 촘촘히 박혀 움직일 때마다 소름끼치는 유리소리를 냈다. 뜨거운 불길을 피해 강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화상으로 오그라든 근육 때문에 헤엄치지 못하고 이내 익사해버렸다.

강물 가득 화상으로 몽그러진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다. 지옥과 같은 당시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나카자와 케이지의 그림은 공포감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원폭의 재앙은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방사능비(일명 '검은비')를 맞았거나 원자폭탄 폭발당시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

어갔다. 패전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원폭 피해자들을 연구 표본으로만 여겨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환자들을 방치한 채 자신들이 터뜨

린 핵폭탄이 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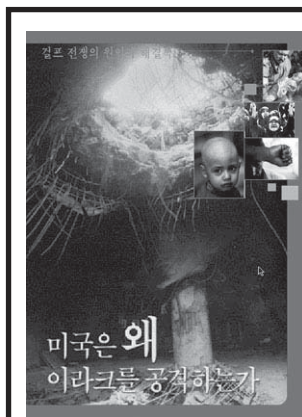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는 데에만 이용했다.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이 보기에 피해상황이 너무나 끔찍했던지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설하지도 못하게 했다. 누구든 원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일단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했다.

겐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핵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을 용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린 일본의 지배자들 또한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다. 소수의 권력자들은 대중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을 일으켰다. 자칭 '신'이었던 천황은 신의 국민들은 죽지 않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전쟁터로 내몰았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민주주의는 극도로 억압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라치면 겐의 아버지처럼 '비국민'의 딱지가 붙여졌고 가족들 모두 온갖 종류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이 패전하자 '비국민'이란 딱지를 붙이며 전쟁을 부추겼던 자들이 '평화주의자' 시늉을 하며 다시 승승장구했다. '인간선언'을 한 천황은 처벌받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전쟁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전쟁 와중에 권력과 부를 누렸던 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권력과 부를 누렸다.

여전히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몰이가 한창이다. 핵공격이란 말도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나카자와 케이지는 겐이 보여준 인간애야말로 야만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온갖 대의명분으로 포장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핵공포를 부추기는 냉혈한들과 맞서려는 사람들은 겐으로부터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은솔



소책자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는가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은 중동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아랍 민중은 어떻게 미국에 저항했는가?
이 소책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값 1,500원

《아랍은 왜 미국에 분개하는가》개정 증보판



20호(2003.1)

- 반미 운동 분석
- 운동과 정당
- 두 개의 미국
- 불량국가
- 미국의 불평등
-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을까?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노무현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
- 한국 대선 결과
- 경제자유구역법
- 북한 핵 논란
- 유엔 무기사찰단의 행적
- 12년 전의 걸프전
- 새로운 세계 불황
- 베네수엘라
- 이스라엘 조기 총선
- 이주노동자 대책 비판



19호(2002.12)

- 미국 중간 선거 결과
- 영국 전쟁저지연합에서 배운다
- 이회창과 맞서 싸울 수 없는가
- 반이회창 운동을 지지해야
- 사회당의 회비국
- 북한 핵 논란
-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 체첸
- 브라질 PT의 선거 승리
- 티커 총선 결과
- 유럽사회포럼



18호(2002.11)

- 미국의 반전 운동
- 반전 운동의 성공을 위한 주장
- 유엔의 추악한 역사
- 브라질 대선 결과
- 민주노동당 선거 강령
- 독일총선 결과



17호(2002.10)

- 부시의 이라크 전쟁
- 후세인은 누구인가
- 마호메트 평전
- 조 · 일 정상회담
- 분단의 정치와 노동자운동
- 문부식 비판
- 석유와 서방 제국주의



16호(2002.9)

- 남한 지배자들의 친미주의
-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
- 9 · 11주년
- 이윤 물이에 희생당하는 지구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논쟁
- 농민은 누구인가
- 북한의 시장 개혁
- 브라질 경제 위기



15호(2002.8)

-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
-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 미국 경제는 추락하는가?
- 플랜 콜롬비아
- 서해교전
- 북한 식량난과 북한난민
- 세계사회포럼
- 아르헨티나



14호(2002.7)

- 서총련 투표 전술 비판
- 북한 난민
- 이주 노동자
-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인도-파키스탄
- 반란의 아르헨티나



13호(2002.6)

- 발진파업의 교훈
- 진중권 비판
- 에이즈
- 베네수엘라
- 이탈리아 총파업
- 중국 노동자투쟁
- 프랑스 대선



12호(2002.5)

-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 피에르 부르디외의 조사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노동자
- 포르투갈레그레
- 엘론스캔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빅토르 위고



11호(2002.4)

- 프랑스 대선
- 반파시즘 투쟁
- 트로츠키는 누구였는가
- 월드컵 제대로 보기
-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10호(2002.3)

- 손석춘 강연
- 누가 핵 미지광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 철도파업 평가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분쟁'
- 이탈리아 노동자투쟁



9호(2002.2)

- 아르헨티나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권정길의 2002년 선거전망
- 주일 근무제
- 정성진의 경제 전망



8호(2002.1)

- 아프가니스탄 여성
- 보신탕 논란
- 인간배아 복제
- 백색공포?
- 스포츠
- 강준만 논쟁
- 브뤼셀 EU 정상회담



7호(2001.12)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
- 인/에드워드 사이드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 노무현 비판
- 수전조지의 WTO 비판
- 마약합법화
- 안락사 · 낙태 · 대리모



6호(2001.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 의 반전 성명서
- 유엔
- 이슬람
-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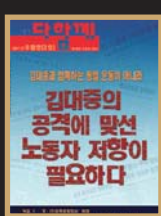
5호(2001.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전쟁
- 김수환 교수 강연



4호(2001.9)

- 제노바 G8 회담 반대 시위
-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3호(2001.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민주노동 상반기 파업 평가
- 지구 은전화와 자본주의
- '8 · 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매춘 합법화



2호(2001.7)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6 · 15선언 1년을 돌아보며
- 새만금 간척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 계급



1호(2001.5)

- 미친스타 워즈 계획
- 부시의 환형 파괴
- 미스코리아 축전
- 경찰의 폭력
- 일본

